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부 · 정치부 · 사회부 · 시민사회담당

발 신 : 유권자운동본부(임효창 상임집행위원장, 서울여대 교수 / 방효창 정책위원장, 두원공대 교수)

담 당 : 경제정책팀(오세형 팀장, 정호철 부장, 이주현 간사 / 02-3673-2173)

제 목 : [기자회견] 주요 정당 서울시장후보 핵심공약 평가와 개혁과제 답변 결과 기자회견 개최

보도일자 : 2026.05.28.(목) 오전 10:30

배포일자 : 2026.05.28.(목) 오전 10:30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 정당 서울시장후보 핵심공약 평가와 개혁과제 답변 결과 기자회견 개최

일시/장소: 2026년 5월 28일(목) 오전 10:30,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팀 팀장

1. 평가 취지와 개요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2. 서울시장 주요후보 3대공약 평가 — 김정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3. 개혁과제 답변 결과 — 정호철 경실련 경제정책팀 부장
4. 총평 — 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 / 두원공대 교수
5. 질의응답

☎ 참석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팀 / 02-3673-2175

[요약]

주요 서울시장후보 공약, 민생 현안은 담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

- 정원오, 5도심·6광역 전환 개혁적이거나, 예산 수준 청사진에 불과
- 오세훈, 주거 예산 임기말 떠넘기기 식, 지하철도 예산낭비 우려
- 김정철, 공공SI 활용 혁신적이거나, 다양성·개혁성 낮아
- 권영국, 노동·복지공약 개혁성은 높으나, 구체성·실현가능성 미흡

1.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 선거를 위해 주요 정당 서울시장후보 4인에게 정견질의를 통해 받은 3대 핵심공약을 평가하고 전국공통·서울시 개혁과제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을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유권자들이 각 후보의 공약을 스스로 검증할 수 있도록, 구체성, 개혁성, 적실성, 후보자의 특성(자질)을 기준으로 정책 내용을 점검한 것이다. 공약검증단장을 맡은 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이번 선거가 거대 정당간 정치구호 경쟁이 아니라, 주거·교통·복지·돌봄·일자리·안전 등 다양한 공약이 시민의 삶을 바꾸는 실천적인 정책 레이스(경쟁)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 경실련 공약검증단은 서울시장후보들의 공약이 대체로 서울시민의 민생 현안과 맞닿아 있으나, 전반적으로 서울시장 공약으로서 다양성이 부족하고 예산·재원 마련의 구체성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는 ‘글로벌 G2 서울,’ ‘30분 통근도시,’ ‘사후복구에서 선제적 예방투자, 재난관리 패러다임 전환’을 핵심공약으로 답변했다. 경실련 공약검증단은 정 후보자의 5도심·6광역 전환 공약이 청년 일자리 성장과 결합돼 개혁적이거나, 개발사업의 예산 규모가 “연구용역비” 수준의 마스터플랜(종합계획)에 불과해 임기 내 실현 가능성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30분 통근도시 공약은 오세훈 후보자와 차별성이 없고, 예산·실행계획이 부족해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정 후보자의 노수 하수관로 정비나 재난관리기금 예방투자 30% 확대 공약은 구체성이 높고 싱크홀·침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긍정 평가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무너진 무주택가구 주거이동 안전망 복원,’ ‘20.8조원을 투입해 강북교통 대동맥 연결,’ ‘기후동행카드를 ‘서울기후동행패스’로, 교통복지 확대’를 핵심공약으로 답변했다. 경실련 공약검증단은 오 후보가 전월세난, 강북 교통격차, 고유가

시대 교통비 부담을 겪는 서울시민의 체감 현안을 포착한 점은 긍정적이나, K-PASS 통합은 이재명 정부와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점, 도로 지하화는 “콘크리트 들이붓기” 식 예산낭비 우려, 그리고 주거 공약 예산안은 전체 3.86조원 중 임기 말 무려 3.22조원(83%)이 편성돼 사실상 다음 시장에게 떠넘기기 식의 무책임한 예산 계획을 포함하고 있어 공약의 구체성과 임기 내 실현 가능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는 ‘AI 행정·자동복지로 ‘찾아오는 서울’,’ ‘규제혁신으로 만드는 ‘부담가능한 서울’,’ ‘출퇴근 30분 단축 ‘막힘없는 서울’ ’ 을 핵심공약으로 답변했다. 경실련 공약검증단은 김 후보가 공공AI를 여러 공약에 적극 활용해 신청주의 복지 사각지대, 인허가 지연, 수의계약 문제, 정비사업 분쟁 등을 해결하겠다는 접근 방식은 혁신적이나, 서울시 내부 행정혁신(개선)에 머물러 서울시장 공약으로서 다양성이 부족하다고 부정 평가하며,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고령층 디지털 소외,” “AI 알고리즘 편향,” “서울시의 빅 브라더(국가 기관의 정보 독점)” 우려를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통 인프라 확충 없이, 시스템 운영 개선만으로 과연 출퇴근 30분 단축이 가능한 것인지 해당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덧붙여 부동산 규제 완화, 규제 프리존 등의 공약은 개발이익 환수방안 강화 조치 없이 갈 경우, 부동산 투기 조장 등의 우려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약의 구체성 만큼은 전문가적 자질과 성실성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평가하며, 타 후보자와 정책 경쟁을 기대한다고 독려했다.

정의당 권영국 후보는 ‘생활필수재 공공보장으로 기본서비스 보장,’ ‘모든 시민이 노동권의 주체가 되는 서울,’ ‘공공돌봄 도시 서울’ 을 핵심공약으로 답변했다. 경실련 공약검증단은 권 후보가 주거·교통·의료·먹거리·노동·돌봄을 공공의 책임으로 규정한 점은 개혁성이 상당히 높으나, 개혁성만 앞세운 나머지 이에 뒤따르는 막대한 예산안 6.34조원의 재원 마련 방안의 구체성이나 그 근거가 부족해 구호에만 머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 후보의 노동 공약에 대해서는 개혁성이 높으나, 서울시장의 권한을 넘은 사안들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실례로, 노동시간 단축, AI 전환 기금, 코로나19 소급 보상, 상가 임대료 상한제 등은 지자체장이나 서울시장의 권한이 없고, 서울시의 단독 조례만으로 강제할 수 없다. 반드시 정부나 국회의 입법 등 협력이 요구되는데, 이 과정에서 민간 시장의 강한 반발이나 갈등을 부를 수밖에 없다. 경실련 공약검증단은 거버넌스 측면에서 권 후보가 사회적 합의 방안을 함께 제시하지 않아 단순히 정치적 구호에만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노동 전문가로서 권 후보자의 전문성이나 강력한 개혁 의지만큼은 존중하지만, 서울시장으로서 공약 이행의 책임성이나 그 실현 가능성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권 후보의 공공돌봄 공약에 대해서는 이번 선거에서 매우 유의미한 공약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3. 끝으로,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가 네 명의 후보자들에게 제안했던 총 10개의 전국

공통·서울특별시 개혁과제에 대한 답변을 분석한 결과, 전체 40건의 답변 중 찬성 24건(60%), 반대 3건(7.5%), 기타 13건(32.5%)으로 나타났다. 후보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가 찬성 5건·기타 5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찬성 2건·반대 2건·기타 6건,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가 찬성 7건·반대 1건·기타 2건, △정의당 권영국 후보가 찬성 10건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60% 찬성 숫자만으로 개혁과제의 공약화나 그 실현 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지만,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후보자의 ‘찬성’ 답변이라도 그 이유나 예산·실행계획 등이 부족하면 결국 형식적 수용에 그칠 수밖에 없고, ‘기타’ 또는 ‘반대’ 답변이라도 더 나은 대안과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면 정책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4.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유권자들이 특정 정당이나 구호가 아니라, 공약이 실제 서울시민의 삶을 실제 얼마나 개선할 수 있는지, 이에 따르는 예산·재원마련·실행계획이 과연 구체적인지, 그리고 후보자의 자질이나 공약 이행의 정책적 책임성까지도 살펴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후보자들이 남은 기간 동안 더 이상 구호가 아니라, 부족했던 공약의 예산·실행계획, 이해관계자와 정책·갈등 조정 방안 등 시민참여 방안을 보완해 정책 레이스를 펼칠 것을 조언하며 평가를 마쳤다.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 정당 서울시장후보

3대 핵심공약 평가와 개혁과제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2026. 5. 28.

I. 평가 개요

1 평가 취지

-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역의 미래와 주민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탄핵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우리 유권자들이 맞이하는 첫 선거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경제 양극화 심화,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 고착화, 지역간 격차 심화, 인구위기와 농촌·지방 소멸 위기,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감소 등 복합적인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역사회는 이러한 사회·경제적 문제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지방권력 교체를 넘어,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 구조, 교통·복지·돌봄·의료 체계, 그리고 주민이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주 기반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우리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 청년들의 서울 쏠림 현상이 가속화된 가운데, 오늘날 서울시장은 대한민국 대통령에 준하는 수도 행정·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서울시민의 삶과 여건을 바꾸는 막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선거는 대한민국 인구 5분의 1에 달하는 막강한 예산과 행정력을 쥔 소위 “소통령”을 뽑는 자리로, 전체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전국 민심의 축소판이자 차기 대선을 가늠하는 정치 풍향계와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진보 성향이 짙은 한강벨트, 강북권 등 지역별·세대별 표심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서울시장선거는 전국적인 민심의 흐름을 대변합니다.

- 특히 서울의 주거·교통·복지 공약에 대한 유권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는 매 선거 때마다 가장 강력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합니다. 2030 청년들을 비롯한 중도·무당층 유권자들은 양당의 거대 이념 담론보다는, 삶과 밀접한 △교통 인프라, △주거 안정, △돌봄·복지 등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생문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 왔습니다.
- 그러나 “미니 대선”이라 불리는 서울시장선거는 그간 이러한 민생 공약보다는, 정쟁 중심의 정치 구도 속에서 야당의 정권심판론과 여당의 거야심판론, 그리고 여야 할 것 없이 기득권 세력의 표심을 붙잡기 위한 인기영합적 선심성 공약이 난무하는 가운데, 서울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 경쟁은 뒷전이었습니다.
-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더 이상 정당간 점유율 경쟁이나 후보자간 비방·정치구호 경쟁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미래를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경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매번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핵심공약을 평가하고 민생 개혁과제를 제시하여 **후보자간 정책 경쟁과 유권자들의 정책 선거를 유도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 이에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서울시민들의 정책선거와 우리 유권자들의 올바른 결정을 위해 4대 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정의당) 서울시장후보들에게 정견질의를 통해 받은 3대 핵심공약을 평가하고, 지난 4월에 발표했던 전국공통·서울특별시 개혁과제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을 알리고자 합니다.**

2 평가 방법

- 대상
 -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장후보 정원오(더불어민주당)·오세훈(국민의힘)·김정철(개혁신당)·권영국(정의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5대 공약 외 경실련의 정견질의를 통해 직접 회신한 **3대 핵심공약**
 - 기타 **전국공통·서울특별시 개혁과제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
- 기간 : 2026년 6월 14일 ~ 6월 25일
 - *서울시장후보 정견질의(5/13) → 공약 회신 마감(5/22) → 공약 평가(5/22~5/25) → 발표

○ 기준 : 공약의 구체성·개혁성·적실성 및 후보자의 특성 등 아래 핵심공약 평가지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핵심공약 평가지표>

평가 지표	세부 평가 기준
공약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약이 구체적이고 완결적인가, 적절한 범위인가? - 임기동안의 연도별 추진 계획이 잘 제시되었는가? - 제시한 공약의 목표는 적절하고 실현가능한가? - 공약에 따른 예산 배분 계획 및 자원 확보 방법이 적절한가?
	정책공약이 육하원칙에 의거 명확하게 유권자가 이해할 수 있는가
공약의 개혁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가? -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 주민의 참여와 권익을 강화하는 정책인가?
	정책공약이 지역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담고 있는가
공약의 적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한 공약이 적절하고 실현가능한가? - 지역주민이 욕구를 충분히 담아내고 있는가? - 공약이 해당 정책 환경과 얼마나 부합하는가? - 공약의 우선순위가 지역현안을 적절히 고려하였는가?
	정책공약이 주민들의 관심이 많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인가
후보자의 특성(자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한 이슈에 대한 입장(발언)이 일관적인가? -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리더십과 전문성이 있는가? -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있는가? - 지역사회의 기관이나 단체와의 원활한 협력이 가능한가?
	후보자가 지역사회와 하나가 되고자 노력하는가

3 공약평가단 구성

- 평가단장 : 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 / 두원공대 교수
- 분야별 평가위원
 - 김정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 방재관리센터 연구실장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교통분과
 - 조정훈 경실련 토지구택위원장 / 감정평가사
 - 허수연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 / 한양대 교수
 - 류성민 경실련 노동위원장 / 경기대 교수
 - 김호림 경실련 AI시민감시단장 / 동양대 교수
 -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
 -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팀장

II. 주요 정당 서울시장후보 핵심공약 평가

1 종합 평가

[핵심 공약]

후보자	제1핵심공약	제2핵심공약	제3핵심공약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도시, 일자리) 글로벌 G2 서울	(교통) 30분 통근도시 실현	(재난안전) 사후복구에서 선제적 예방투자로, 재난관리 패러다임 전환
오세훈 (국민의힘)	(주거) 무너진 무주택가구 주거이동 안전망 복원	(교통) 20.8조원을 투입해 강북교통 대동맥 연결	(교통) 기후동행카드를 ‘서울 기후동행패스’ 로, 교통복지 확대
김정철 (개혁신당)	(공공AD) AI 행정·자동복지로 ‘찾아오는 서울’	(주택) 규제혁신으로 만드는 ‘부담가능한 서울’	(교통) 출퇴근 30분 단축 ‘막힘없는 서울’
권영국 (정의당)	(사회복지) 생활필수재 공공보 장으로 기본서비스 보장	(노동) 모든 시민이 노동권의 주체가 되는 서울	(사회복지) 공공돌봄 도시 서울

[종합 평가]

- 전체적으로,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장후보자들의 공약은 다양성이 부족했다. 공공돌봄 공약을 제외하면, 우리 사회에 유의미한 공약을 찾아볼 수 없었다.
 - 그나마 정원오·오세훈 후보자의 공약이 적실성이 높았으나, 예산 측면에서 공약의 구체성과 책임성이 결여돼 구호에만 그칠 가능성이 높았고 실현가능성 또한 부족했다.
- (정원오 후보) ‘(제1핵심공약) 글로벌 G2 서울’ 공약의 5도심·6광역 중심체계 전환은 강남 중심 체계를 탈피하고, 기존 기득권 중심의 개발 패러다임에서 청년 일자리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혁신 도시로 거듭나는데 있어 공약의 개혁성만큼은 높이 샀다. 그러나 일자리 공약의 질적 수준이 낮고, 제1핵심공약에 책정된 예산 수준을 살펴봤을 때, 20억 원 수준에 머물러 “마스터플랜(종합설계)을 위한 연구용역” 수준에 불과했다. 즉, 글로벌 G2 서울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 외에는 임기 내 실현 가능성은 없다. 특히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지역주민”이 빠져있어 공약의 적실성이 제한된다.
- 이어서, ‘(제2핵심공약) 30분 통근도시 실현’ 공약은 서울시 현안과 적실성이 높지만, 오세훈 후보자의 공약(제3핵심공약)과 차별성이 없고, 총 15.5조 원 규모의 사업에 비해 연도별 자원 배분과 실행 로드맵이 미비해 정책적 완결성이 매우 낮아 막연한 선언에 불과했다.

공약의 구체성·개혁성·적실성이 모두 낮아 정책 보완이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 다만, ‘(제3핵심공약) 사후복구에서 선제적 예방투자로, 재난관리 패러다임 전환’ 공약은 구체성과 적실성이 높은 공약으로 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싱크홀(지반침하)·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정량적인 목표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예방투자 비율을 30% 이상으로 높이는 등 시의적절한 정책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종합적인 재난안전관리 대책은 아니라는 점에서 개혁성은 제한된다.

→ (오세훈 후보) ‘(제1핵심공약) 무너진 무주택가구 주거이동 안전망 복원’ 공약은 최근 전월세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무주택 서민들의 현실을 잘 짚어냈다는 점에서 공약의 적실성만큼은 높게 살만하나, 과연 임기 내 ‘공공주택 13만 호 공급’이라는 거창한 목표와 달리 총 예산 3.86조원 중 83%(3.22조원)를 임기 종료 후인 2031년으로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기형적인 무책임한 재정 계획을 갖고 있어 공약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 전·현직 서울시장인 후보자의 자질이 의심스럽다. 특히, 공급 물량 대부분이 기존의 단순 매입임대 방식에 치중되어 있어, 고가 매입, 혈세 낭비, 부동산 가격 상승 유발 우려가 커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 이어서, ‘(제2핵심공약) 20.8조원을 투입해 강북교통 대동맥 연결’ 공약은 강남과의 인프라 격차 해소라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적실성은 높으나, 총 20.8조원의 천문학적 예산을 공공부지 매각이나 기존 예산 전용 등 불확실한 재원으로 충당하려 해 공약의 구체성이 낮다. 특히, 혈세를 낭비하는 지하철도, 철도 신설 등 계획은 과거 토건 중심의 콘크리트 들이붓기 식 개발사업에만 머물러 있어 공약의 개혁성은 없다.

- ‘(제3핵심공약) 기후동행카드를 ‘서울기후동행패스’ 로, 교통복지 확대’ 공약은 최근 고유가 시대에 기후위기 대응과 교통비 절감 희망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적실성이 높은 공약이나, K-PASS 통합의 전제는 이재명 정부와의 합의와 국비 지원(최대 1000억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관련 세수 부족이나 협의 실패 시 공약 전체가 무산될 위험을 안고 있다. 때문에, 서울시 시비로만 충당할 수 있는 “플랜 B” 또한 필요하다.

- 나머지 김정철·권영국 후보의 공약은 서울시장으로서 다양성이 부족하고, 실현 가능성은 미흡하다.

→ (김정철 후보) 우선, ‘(제1핵심공약) AI 행정·자동복지로 ‘찾아오는 서울’ ’은 AI를 활용해 혁신성 면에서 우리 공약평가단의 눈길을 끌었다. 물론, 전통적인 신청주의 행정복지의 사각지대를 AI 시대에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발상에 대해서는 높이 사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급자 관점의 서울시 내부 행정혁신(개선)을 제1핵심공약으로서 유권자들에게 내세울 만한 개혁적 가치나 근거는 적다. 특히, 고령의 디지털 소외계층의 접근성 역차별 문제에 대해 간과했고, 서울시의 빅 브라더 우려와 데이터 주권 침해나 알고

리즘의 편향성과 불투명성 우려까지 함께 고려했어야 한다. 다만, 공약 자체의 구체성과 일부 적실성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 할 수 있다.

- 이어서, ‘(제2핵심공약) 규제혁신으로 만드는 ‘부담가능한 서울’ 공약은 후보자의 전문성과 실무 경험에 근거하여 매우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세부 공약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단순한 “물량 밀어내기식 공급”을 넘어, 정비사업 지연의 근본 원인인 ‘조합 내부 분쟁’을 해소하고, 1인 가구 증가라는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한 우수 공약이다. 특히 블록체인 기반의 의결 시스템과 분담금 시뮬레이터 도입은 행정의 객관성을 높이는 훌륭한 수단임. 전반적인 공약의 완결성은 있지만, “고령층 조합원의 디지털 소외 문제”나 공공조합장 파견에 따른 기존 기득권의 반발을 제어할 세밀한 거버넌스가 보완되어야 한다. 덧붙여 부동산 규제 완화, 규제 프리존 등의 공약은 개발이익 환수방안 강화 조치 없이 갈 경우, 부동산 투기 조장 등의 우려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 ‘(제3핵심공약) 출퇴근 30분 단축 ‘막힘없는 서울’ 공약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있다. 신호 통합이나 주차장 개선 등 운영 시스템 효율 개선만으로 과연 출퇴근 시간 30분 단축이 가능한지 그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다만, 공약 자체만 놓고 보면, 시민들에게 필요한 적실성이 높은 공약이고, 기존 “지하철 노선을 더 파겠다”식의 인프라 확충 공약과 달리, 토건 중심의 하드웨어 개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소프트웨어 개혁을 구상한 점은 공약의 개혁성과 차별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공약의 구체성 면에서도, 검증됐던 사업비를 근거로 효율적인 예산을 추계한 점, 국비-민자간 매칭 비율이 현실적인 점, 촘촘한 로드맵을 제시한 점 등으로 비추어 보아 전문가 적인 후보자의 특성과 성실성이 매우 돋보인다.

→ (권영국 후보) 우선 ‘(제1핵심공약) 생활필수재 공공보장으로 기본서비스 보장’ 공약은 잔여적 선별 복지를 넘어 주거·교통·의료·먹거리처럼 시민의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다양한 기본서비스를 공공의 책임으로 규정한 점, 시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완전 공영제로 전환하려는 점, 서울시 의료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부터 줄이려는 방안 등은 개혁성이 높은 공약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개혁성만 앞선 나머지 공약의 실행에 요구되는 예산 6.34조 원의 막대한 재원을 과연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구체성과 현실성이 부족하다. 또한 현행 서울시 산하 공공병원 의사도 구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나 비급여 비용 지원에 따른 과잉진료 부작용에 대한 통제방안까지 함께 고려되지 않았다. 특히 거버넌스 측면에서, 다주택자 재산세 탄력세율 상향이나 민간 버스 완전 공영제 전환에 따른 반발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아 현실성이나 실현 가능성은 부족한 공약이다.

- ‘(제2핵심공약) 모든 시민이 노동권의 주체가 되는 서울’은 서울시장의 권한을 넘어선 현실성이 미흡한 공약이다. 예를 들면, 노동시간 단축, AI 전환 기금, 코로나19 소급 보상, 상가 임대료 상한제 등은 적실성이나 개혁성이 높지만, 지방자치단체장과 서울시 단독 조례만으로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고, 반드시 중앙정부나 국회와의 협력이 요구돼 **공약의 구체성이 부족하다**. 또한 이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시장의 강한 반발을 부를 수밖에 없는데, 거버넌스 측면에서 사회적 합의 방안을 함께 제시하지 않아 **단순히 정치적인 구호에만 그칠 가능성이 높다**. 노동 전문가로서 후보자의 전문성과 강력한 개혁 의지만큼은 존중하지만, **공약 이행의 책임성이 없고 실현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 끝으로, ‘(제3핵심공약) 공공돌봄 도시 서울’ 공약은 돌봄의 위기를 단순한 복지 지출이 아닌 **‘지역 활력을 위한 투자(일자리 창출)’**로 바라보고 아동·어르신·간병·지역돌봄을 공공의 책임으로 통합하는 **개혁성과 적실성이 높은 우리 사회에 유의미한 공약이다**. 다만, 공공돌봄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2.4조원으로 추산했는데 AI 전환 기금 연계를 비롯한 재원 마련과 예산안의 근거가 불투명하고, 큰 틀에서 기존의 통합돌봄서비스 등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고민과 계획이 부족하다.
- 요컨대, 이번 서울시장후보자들의 **공약의 적실성이 높아 서울시(민)의 민생 현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았다**. 그러나 서울시장 공약으로서 **다양성이 부족했다**. 특히,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개혁성만 앞세운 나머지, 대다수의 공약이 예산 재원 마련의 구체성이나 그 근거가 불투명해 실현 가능성이 의심스럽고, 후보자의 특성(전문성, 경력 등)에 기대한 것과 달리 **공약 이행의 책임성이나 현실성이 없는 구호성 공약도 적지 않았다**. 보다 체계적인 실행 로드맵과 예산 계획 보완이 요구된다. 우리 유권자들의 철저한 검증이 요구된다.

평가 지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오세훈 (국민의힘)	김정철 (개혁신당)	권영국 (정의당)
공약의 구체성	정량 목표와 예산 배분이 구체적이나, 재원·연도별 계획 부족	서울기후동행페스와 달리, 주택·강북교통 공약은 재원조달과 예산 책임성 부재	세부 사업별 구체적인 산정 근거와 추계, 연도별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	세부사업 로드맵이 있으나, 예산안의 근거와 재원 마련 방안 불투명
공약의 개혁성	강남중심 성장구조 탈피, 예방투자 재난관리 긍정적	교통복지 확대는 긍정적이나, 강북교통 공약은 불필요한 예산낭비 토건사업	AI를 활용한 행정개혁 정책적 아이디어가 돋보이나, 다양성이 부족하며 내부 행정개혁 수준에 머물러 개혁적 가치가 낮음	주거·교통의료·먹거리·노동·돌봄을 공공 책임으로 규정, 사회개혁적
공약의 적실성	통근시간 단축, 싱크홀·침수 예방은 서울시 핵심 현안	서울시 현안에 대한 포착력이 높음	복지 사각지대, 재개발·재건축 분쟁 등 시민이 체감하는 의제 선정	서울시민의 민생현안과 직접 연결
후보자의 특성	행정 기획력은 있으나, 대규모 예산 사업 재정 책임성 취약	전·현직 시장 경력에 비해 책임성이 부족	대형 토목보다, 기술·데이터·운영 효율화로 기획력과 정책 완성도가 높음	노동 분야 전문성은 문제 인식은 높으나, 정치·행정·거버넌스 조정력 부족
보완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분 통근도시 연도별 예산 배분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 예산 2031년 편중 임기 외 예산 떠넘기기 도시고속도로 지하화 타당성 재검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라이버시 침해 AI 알고리즘 편향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규모 재원 조달 단계별 실행 가능성 검증 필요

2

핵심공약별 세부 평가

1) 정원오 서울시장후보 / 더불어민주당

구분	공약명	핵심 내용
제1핵심공약	(도시, 일자리) 글로벌 G2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도심·7광역 중심체계에서 → 5도심·6광역 중심체계로 전환 • 개발 중심 도시에서 → 성장과 혁신의 도시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량리·왕십리 및 신촌·홍대 혁신도심 지정 - 서울 전역 성장축 확산
제2핵심공약	(교통) 30분 통근도시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격자형 철도망 • 동부선·서부선·강북횡단선 등 경전철 조기 추진 • 5분 정류소 • K-모두의기후동행카드
제3핵심공약	(안전) 사후복구에서 선제적 예방 투자로, 재난관리 패러다임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 하수관로 정비 100km → 150km 확대 • 50년 이상 고위험 노후관 우선 정비 • 재난관리기금 예방투자 30% 이상

① (제1핵심공약) 글로벌 G2 서울

[핵심 내용]

- **(핵심요지)** 서울의 성장축을 강남·도심·여의도 중심에서 서울 전역으로 확장해, 서울을 개발 중심 도시에서 성장·혁신 중심 도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 즉, 서울의 성장 중심을 강남권에만 두지 않고 청량리·왕십리, 신촌·홍대 등으로 확장해 서울 전역을 혁신·창업·일자리 거점으로 재편하겠다는 도시공간 성장전략을 제시.
- **(문제인식)** 서울은 인재·자본·기술·문화가 집적된 도시이지만, 세계도시 경쟁력은 정체되고 경제성장률도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
- **(핵심방향)** 기존 3도심 체계를 청량리·왕십리, 신촌·홍대까지 포함한 5도심 체계로 확대.
- **(공간전략)** 5도심·6광역중심 체계를 구축하고, 광역중심과 특구·산업 파이프라인을 연결.
- **(주요 대상지)** 청량리·왕십리, 신촌·홍대, 성수, 상암DMC, 홍릉, 용산, 상암·수색, 구로·가산, 창동·상계 등.
- **(추진 로드맵)** 2026년 도시기본계획 변경 착수 및 혁신도심 지정 방안 마련 → 2027년 실행계획 수립 및 착착 경제활력존 시범 지정 → 2028년 혁신도심별 앵커시설 조성 착수 → 2029년 5도심·6광역중심 체계 법적 고시 추진.

- **(예산/재원)** 전체 예산은 20억 원 이상으로 제시. 기존 도시계획·산업·창업·문화·상권 활성화 예산을 G2 서울 전략축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고, 서울투자공사 등 공공투자 플랫폼을 통해 민간자본·VC·글로벌 정책금융을 유치한다는 계획.
- **(기대효과)** 강남·도심·여의도에 집중된 성장기회를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고, 청년이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배우고 창업하고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며,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환원하는 도시모델을 만들겠다는 것.

[공약 평가]

- **(공약의 구체성)** 공약을 위한 기본적인 법·계획·예산 등 4개년 연차별 계획이 구체성이 있다고 볼수 있음. 그러나 5도심·6광역 중심체계로 바꾸는 구체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다소 불분명하고, 공약실행을 위한 재정조달 수단이 불분명. 강남과 도심 그리고 여의도에 집중된 도시기능을 확장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서울 전체로 경제 성장동력을 확산시키는 데는 많은 자원과 시간이 필요하며, 제시한 공약은 임기 내에 실현 가능한 정책적인 부분만을 일부 제시함.
 - 예산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시도비)만 제시함. 실제 시범사업이나 지역 활성화에 투자/지원해야하는 민간/국비의 규모는 제시하고 있지 않음. 예를 들면, ‘앵커시설 조성’을 공약에 명시하고도 국비나 민자 유치 없이 오직 시·도비로 매년 5억 원 이상씩 ‘총 20억 원 이상’ 이라고만 책정되어 있음. 이는, 대규모 인프라 조성이 아닌 단순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연구용역비” 수준에 불과함. 또한 자원 마련 대책에 ‘글로벌 VC 유치’ 등을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목표 수치나 유인책이 없어 실현 가능성을 납득하기 어려움.
 - 노동·일자리 관점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창업공간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구체적인 규모, 고용형태, 임금수준, 노동권 보장, 사회보험 적용, 지역별 일자리 순증 목표가 없음.
- **(공약의 개혁성)** 최근 글로벌 메가시티의 당면 과제가 지속가능한 도시시스템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도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목표제시로서 적절하다 볼 수 있다. 그러나 5도심·6광역 공약은 ‘성장혁신’을 내세우고 있으나, 기존의 “개발중심” 공약과 큰 차별성은 없음. 기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2030·2040서울플랜 등과의 차별성이 무엇인지 불분명함.
 - 강남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균형형 산업공간을 조성한다는 방향은 긍정적. 강남 중심의 낡은 공간 구조를 탈피해 성수, 홍대, 청량리 등 자생적 성장 자산을 5도심으로 묶어내려는 시도는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로서 매우 혁신적임. 개발 이익을 소수 민간이 독점하지 않도록 ‘공공토지 보유 및 장기 운영’을 통해 시민에게 환원하겠다는 선언은 시민 권익을 강화하는 훌륭한 개혁이나, 도시모델 구축에 주민이 어떻게 의사표시 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지

불명확함.

- 서울의 여러 지역에 경제사회적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중심지를 두는 것은 전체적으로는 지역발전에 긍정적이라 평가할 수 있음. 다만, 제시된 지역기반의 창업과 청년일자리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모든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므로 다양한 계층의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의 제시가 요구됨. 개발·창업공간 공급과 민간투자 유치의 핵심이며, 노동자의 권익 강화나 지역주민 참여·혜택 구조는 약하여, 성장이 곧 일자리의 관점에 머물 가능성이 높음.
- **(공약의 적실성)** 2030년 세계도시종합력지수 GPCI Top 3 진입과 아시아 경제문화수도 1위 달성을 통해 뉴욕과 경쟁하는 G2 서울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나, 현실적으로는 단기간(임기 내)에는 다소 실현이 어려울 있는 목표로 보임.
 - 청년들이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일하고 창업할 수 있는 ‘직주근접(職住近接)’ 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는 현재 서울 시민들의 가장 절실한 욕구와 정책 환경에 일정 부분 잘 부합함. 성장 동력 정체와 지역 불균형은 서울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오랜 현안임. 그러나 모든 주민이 개발로 대변되는 단기간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모두 긍정적으로만 보지 않는 측면도 있음.
 - 해당 공약 내용 자체가 결국 개발을 염두에 둔 것으로서, 환경적인 부분을 크게 고려하고 있지 않음. 또한 구체적인 취약계층과 연계가 없음.
 - 서울이라는 도시의 기능을 발전시키기 위한 큰 측면에서는 현안으로 볼 수 있으며, 현재 서울이라는 도시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 주택, 교통, 환경 등 다양한 세부 현안들 가운데 공약우선순위를 따지는 것은 다른 문제로 볼 수 있음. 다만, 자원 마련과 우선 순위가 불분명하고, 예를 들면, 경제활력존 시범 지정, 혁신도심별 앵커시설 조성 등을 위한 자원 마련이나 우선순위가 불분명함.
- **(후보자의 특성)** 도시공학적 공간 재편을 짚어내는 거시적 안목이나 행정적 기획능력은 높으나, 노동·상공인·주민조직과의 거버넌스가 취약하고, 공공가치와 상충되는 측면 존재.
 - 성동구청장 시절 리더십이 있다고 평가 할 수 있음. 다만, 서울시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나, 시간을 갖고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도시공간 재편과 공공투자 플랫폼 구상은 행정적 기획능력을 보여주고 있음. 그러나 5도심·6광역 공약은 막대한 행정력을 동원, 천문학적인 자본이 필요한 사업을 공약하면서 예산 규모를 20억 원으로 축소 산정한 것은 재무적 전문성과 책임 있는 행정 리더십에 대한 신뢰도를 다소 떨어뜨림.
 - 특히, 도시공간 재편 계획에서 노동조합·노동센터·상공인·주민조직이 함께 참여하는 일자리 거버넌스가 부재
 - 결국, 개발확대 공약이므로, 개발이익환수, 공공성 강화의 가치와 상충되고, 개발기대감을 커지게 하여, 땅값과 집값을 올리고 공공주택확대, 매입임대주택 확대 정

책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공약에 불과.

○ **(총평)** 정원오 후보자의 제1핵심공약인 ‘글로벌 G2 서울’은 개혁성·적실성 면에서 우수하나, 구체성 면에서 기존 개발공약과의 차별성이 없고 서울시 공간 구조를 개편하는 매머드급 사업임에도 4년간 총예산이 단 20억 원(연 5억 원)만 책정되어 있어 재정조달 수단이 불분명해 실행력에 의문이 듦. 또한 개발사업과 일자리의 양적 성장에만 머물고 있어,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나 지역주민 등 취약계층과 연계가 부재.

- **(예산 규모의 비현실성 및 예산 수단의 추상성)** 현재 책정된 20억 원이 “추진체계 및 설계 마스터플랜 용역비” 임을 공약집에 명확히 수정 공시할 필요.

→ 앵커시설 조성에 투입될 수조 원 단위의 “(가칭) G2 혁신 민관합동 펀드” 조성 목표액을 연도별로 가설정하여 예산안을 전면 현실화할 것을 권고함.

② (제2핵심공약) 30분 통근도시 실현

[핵심 내용]

○ **(핵심요지)** 서울 시민의 장시간 출퇴근 문제를 줄이기 위해 철도망·버스망·교통카드·요금제도를 함께 개편하겠다는 교통 공약. 즉, 철도는 격자형으로 촘촘히 깔고, 버스는 생활권 중심으로 재편하며, 교통카드·요금제까지 통합해 서울 어디서나 빠르고 저렴하게 이동할 수 있는 ‘30분 통근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제시.

○ **(문제인식)** 장시간 출퇴근으로 직장인의 피로가 커지고 삶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으며, 과거 지하철 중심의 시내버스 노선 설계로 버스 효율성이 떨어지고 교통 소외지역의 접근성 격차가 심화됐다는 진단

○ **(핵심목표)** 10분 역세권, 5분 정류소, 30분 통근도시 실현

○ **(철도)** 격자형 철도망 구축을 통해 동부선 신설, 서부선·강북횡단선 등 지연된 경전철 조기 착공 추진

○ **(버스)** 버스 노선 효율화,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공공버스 투입, 출퇴근·팔로워·공공 등 맞춤형 버스 도입

○ **(교통비)** 정부 K-패스와 통합해 전국 어디서나 사용하고 환급받는 K-모두의기후동행카드 도입, 대중교통존 버스 동일노선 및 코레일 구간 재승차 무료, 어르신 마을버스 무료화 등 추진

○ **(예산규모)** 총 재원소요는 약 15.5조 원, 이 중 시비는 약 6.1조 원으로 추정

○ **(기대효과)** 출퇴근 시간 단축, 교통 소외지역 개선, 맞춤형 대중교통 제공, 시민 이동권 보장,

[공약 평가]

- **(공약의 구체성)** 30분 통근을 위한 철도망 구축, 버스노선 효율화, 공공버스 투입, 기후동행 카드 도입, 일부 무료화 지원 중심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다만 버스노선 효율화를 위해서는 현행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이 단순히 버스노선 효율화로만 제시하고 있음.
- 로드맵 및 재원 소요 사업별 총예산(15.5조 원)은 명시되어 있으나, 4년간의 연도별 예산 배분 계획이 매우 미비함. ‘국비 및 민간투자를 최대한 확보하고 시비 여유 재원을 순차 투입한다’는 설명은 구체적인 재정 추계라기보다는, 막연한 선언에 불과함. 더욱이, 2028년과 2029년의 버스 정책 로드맵은 아예 공란으로 비워져 있어, 임기 내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의 완결성이 매우 떨어짐. 버스에 대해서는 2026~2027년, 그리고 철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 특히, 2026년에 버스노선 개편을 하겠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준공영제로 운영중인 기존 버스노선에 대한 검토 및 개편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되는 등 추진계획은 다소 부실하다 볼 수 있음.
- 버스와 관련된 대부분의 공약 내용은 시간을 갖고 추진하면 실현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음. 다만, 경제성이 나오지 않아 보류 및 지연되고 있는 경전철 노선 등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평가됨. 서울시 예산 이외에도 약 10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며, 특히 도시철도 등에 필요한 재원을 국비 지원과 민간투자사업 등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 하겠다는 방안임. 버스와 관련해서는 현재 매년 약 8천억 정도가 버스준공영제에 투입되고 있는 부분을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하지만, 협약변경 없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재원확보 방안은 다소 불명확하다 볼 수 있음.
- **(공약의 개혁성)** K-모두의기후동행카드 통합과 같이, 대중교통의 이용을 촉진시키는 것은 어느 정도 친환경 정책이라 볼 수 있음.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자동차 운행감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필요 있음. 또한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어르신 요금 복지 등은 시민의 이동권 보장, 기후위기 대응 등 지속가능발전 비전에 부합함.
- 다만, 미래 지향적인 “스마트 모빌리티(수요응답형 교통, 자율주행 연계 등)”로의 전환 비전이 담겨 있지 않아 AI시대에 걸맞은 소프트웨어적 개혁성은 부족함.
- **(공약의 적실성)** 대중교통의 강화는 지역현안과 부합한다 볼 수 있다. 장시간 출퇴근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와 특정 지역의 대중교통 소외 현상은 현재 서울 시민들이 매일 피부로 느끼는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현안임. 격자형 철도망 구축과 환승 요금 개선 등은 이러한 지역사회의 핵심 욕구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음.

- 대중교통수단의 개편은 시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대표적인 정책 사안 가운데 하나이며, 공약내용은 주민의 편익을 강화하는 정책임. 공약에서 제시하는 신설 철도망은 건설된다면, 서울의 도시교통망을 강화시켜 서울의 지속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됨. 철도망 신설을 통해 그동안 소외된 지역의 주민에 대한 공공교통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기대됨. 철도망 신설을 통해 그동안 소외된 지역의 주민에 대한 공공교통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이뤄진다는 측면에서 지역주민의 욕구를 담아내고 있음.
- 그러나 버스의 경우 노선 효율화, 이용 편리성 강화 등의 경우 선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주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다소 불투명함. 다만, 버스와 관련된 대부분의 공약 내용은 시간을 갖고 추진하면 실현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음.
- 반면, 경제성이 나오지 않아 보류 및 지연되고 있는 경전철 노선 등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고 평가됨.
- **(후보자의 특성)** 15조 원 규모의 대형 사업을 공약하면서, 기본적인 연도별 재원조달 로드맵조차 완성하지 못한 것은 책임 있는 행정가로서의 재무적 전문성을 의심케 함.
- 특히, 노선 개편이나 기후동행카드 통합은 필연적으로 기존 운수업체 및 타 지자체와의 첨예한 갈등을 유발하지만, 이를 원활하게 조정할 다원적 거버넌스 리더십이 공약 내에서 보이지 않음.

○ **(총평)** 정원오 후보자의 제2핵심공약인 ‘30분 통근도시 실현’은 시민들의 극심한 출퇴근 교통과 대중교통 소외 현상을 정확히 지적했다는 점에서 현안의 적실성은 높음. 그러나 15조 5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각 년도의 실행 로드맵이 미비하며, 연도별 재원 배분 계획조차 구체적 수치화가 약하여 공약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음. 대규모 토목 공사라는 하드웨어적 접근에만 매몰되지 않고, 모빌리티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지능형 교통 체계(ITS)’ 고도화 및 시민 데이터 주권 보호 방안이 보완될 필요

- **(아날로그식 노선 개편)** ‘버스 노선 효율화 및 맞춤형 버스 도입’을 내세웠지만, 이를 어떻게 실행할지 기술적 방법론이 부재. 과거서처럼 직관이나 단순 민원에 의존해 노선을 긋는다면 예산 낭비와 비효율이 또 반복될 수밖에 없음.
 - 공약 세부 실행 프로그램에 “AI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DRT) 및 다이내믹 라우팅(Dynamic Routing)” 도입을 명시해야 함. 통신사 유동 인구 데이터와 교통카드 승하차 빅데이터를 학습하여, 시민들의 실제 이동 수요에 맞춰 버스 노선과 배차 간격이 실시간으로 최적화되는 지능형 교통 체계(ITS) 구축 예산을 우선 배정해야 함.
- **(재정의 불투명성)** 2028~2029년 로드맵이 공란이고, 예산 배분표가 없는 상태에서 추진되는 15조 원 규모의 토목 공사는 다음 임기나 중앙정부로 책임을 떠넘기는 선언적 공약이 될 가능성이 큼.

→ 철도망 구축은 장기 과제로 두더라도, 임기 내 투입 가능한 시비 규모(예: 연간 15조 원 수준)를 한정하고 그 안에서 민자 유치(BTL/BTO) 비율과 국비 매칭 액수를 연도별로 정확히 분할한 “모빌리티 특별회계 중장기 재정 계획표”를 투명하게 작성하여 공개해야 함.

㉓ (제3핵심공약) 사후복구에서 선제적 예방투자로 재난관리 패러다임 전환

[핵심 내용]

- **(핵심요지)** 서울의 노후 하수관로와 기반시설 위험을 사고 발생 후 복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위험이 큰 곳을 먼저 찾아 정비하는 예방 중심 재난관리 체계로 바꾸겠다는 것임. 즉, 노후 하수관로를 더 빠르게 정비하고 재난관리기금을 예방사업에 더 많이 투입해, 서울의 재난관리 방식을 ‘사고 뒤 복구’에서 ‘사고 전 예방’으로 바꾸겠다는 안전 공약임.
- **(문제인식)** 서울시 하수관로 중 30년 이상·50년 이상 노후관이 많고, 지반침하·싱크홀·침수·도로 함몰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진단
- **(핵심목표)** 노후 하수관로를 조기 정비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예방투자 비율을 높여 사후복구 중심에서 선제적 예방 중심으로 전환
- **(주요 실행방안)** 현재 연간 약 100km 수준인 하수관로 정비 물량을 연간 150km 수준으로 확대
- **(우선 정비 대상)** 50년 이상 고위험 노후 하수관로를 우선 정비해 싱크홀, 침수, 도로 함몰 위험 완화
- **(재난관리기금 운용)** 재난관리기금 중 예방사업 투자 비율을 현재 10~20% 수준에서 30% 이상으로 단계적 확대
- **(예산규모)** 2026~2030년 직접 예산 총 1조 5,675억 원 (2026년 2,239억 원, 2027년부터 연 3,359억 원 수준 편성 계획)
- **(기대효과)** 지반침하·싱크홀 사고 예방, 보행 안전 확보, 침수·붕괴·도로 함몰 등 복합 재난 위험 완화, 서울시 안전재정의 예방 중심 전환

[공약 평가]

- **(공약의 구체성)** 단일 내용만으로는 완결적이라 볼 수 있음. 그러나 서울시의 도시안전 문제에는 기후변화를 포함한 자연재난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재난이 존재하고 있어 서울시 장으로서 시민안전을 위해 고려해야 할 범위로는 다소 한정적이며 미흡하다 볼 수 있음.
 - 연도별 추진계획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대규모 토건 공약들과

달리, 예산 배분의 완결성이 매우 뛰어나. 하수관로 정비 물량을 연간 100km에서 150km로 확대하겠다는 명확한 정량적 목표가 있으며, 2026년 2,239억 원을 시작으로 2027년부터 매년 3,359억 원씩 시도비를 편성하겠다는 구체적인 재정 추계가 돋보임. 재난관리기금의 예방투자 비율을 30% 이상으로 상향한다는 기준점도 훌륭함.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이외에 재난관리 기금을 활용한 재원확보방법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임.

- **(공약의 개혁성)** 재난 관리의 패러다임을 ‘복구’에서 ‘예방’으로 바꾸겠다는 철학은 시민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개혁임. 서울시의 기반시설 가운데 가장 취약하고 문제가 큰 것이 하수도로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지속성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됨. 하수관로 교체사업은 지자체 발주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강동구 도로 붕괴사고와 유사한 사고를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주민의 재난안전서비스 권리 강화된다 볼 수 있음.
 - 다만, 파이프 연한이 단순히 50년을 넘었다고 기계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과거의 방식이며, 지하시설물 관리 빅데이터와 AI 등을 활용한 혁신적인 스마트 미래 도시의 안전관리 비전이 부재한 점은 다소 아쉬움.
- **(공약의 적실성)**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도 지적한 바, 최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지반침하(싱크홀)와 기후 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최우선 현안임. 노후 기반시설 정비와 시민 불안 해소는 현재 서울시 정책 환경의 가장 시급한 욕구와 완벽히 부합함.
 -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증가로 서울시내 상습침수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재난안전 이슈가 지역의 부동산 가치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역적인 핵심사업이 되기도 함.
 - 기후변화라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약으로 우기의 배수 이외에도 하수관로 교체를 통한 하수배출의 원활화는 매우 친환경적인 공약으로 볼 수 있음. 서울시내에 노후하수관으로 인한 도로 파손의 문제와 저지대가 아님에도, 배수 불량으로 인한 상습침수지역의 주민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
- **(후보자의 특성)** 기존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재난관리기금을 영리하게 연계하여, 무리한 외부 자금(민자, 국비)에 의존하지 않고 시 자체 재원으로 실현 가능한 예산안을 짰 점에서 앞선 토건 공약들과 달리 행정가로서의 탄탄한 재무적 전문성이 돋보임.

○ **(총평)** 정원오 후보자의 제3핵심공약인 ‘사후복구에서 선제적 예방투자로, 재난관리 패러다임 전환’은 기후위기와 인프라 노후화로 인한 시민의 불안(싱크홀, 도심 침수 등)을 해소하는 시의적절한 정책임. 특히 재원 마련 방안과 연도별 예산 투입 계획(매년 3,359억 원 편성)이 명확하고 현실적으로 제시되어 공약의 구체성이 매우 높음. 다만, 종합적인 재난 안전관리 대책은 아니라는 점에서 다소 미흡하다고 볼 수 있음.

- (노수관 정비 등 과학적인 재난·안전관리 부재) ‘50년 이상 노후관’이라는 단순 연한에만

의존하는 아날로그적 하드웨어 정비에 머물러 있어, AI와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예측 시스템” 구축으로 전면적인 소프트웨어 고도화가 보완될 필요

→ 예를 들면, 공약 세부 프로그램에 ‘AI 기반 기반침하(싱크홀) 예측 시스템 및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구축’ 을 명시해야 함. 서울시 지하 공간을 3D 데이터로 구현하고, IoT (사물인터넷) 센서와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빅데이터를 학습시켜 붕괴 임계점을 사전에 경고하는 지능형 관제 시스템 예산을 배정할 필요.

- (예방투자 기금 집행의 투명성에 대한 감시 부재) 재난관리기금의 예방투자 비율을 30%로 상향하는 것은 좋으나, 이 막대한 예산이 어떤 하수관로 업체에, 어떤 기준으로 배정되는지 객관적으로 감시할 장치도 필요.

→ 안전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 외에도, 데이터 과학자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스마트 도시안전 위원회” 를 신설할 것을 추천함. AI 알고리즘 기반의 위험도 평가 점수에 따라 예산 투입 우선순위가 결정되도록 하여, 특정 지역의 정치적 민원이나 수의계약 비리가 개입할 여지를 원천 차단토록 예방할 필요

2) 오세훈 서울시장후보 / 국민의힘

구분	공약명	핵심 내용
제1핵심공약	(주택) 무너진 무주택가구 주거이동 안전망 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1년까지 공공주택 약 13만 호 • 공공분양 바로내집 6,500호 • SH임대주택 바로입주제 • 빌라·다세대 지원
제2핵심공약	(교통) 20.8조 원을 투입해 강북교통 대동맥 연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고속도로 2개 • 도시철도 7개 노선 • 강북권 노후역사 개선 등 15개 교통사업
제3핵심공약	(교통) 기후동행카드를 서울기후동행패스로, 교통복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패스와 통합 • 70세 이상 일부 이용자 교통비 100% 지원 • GTX-A·신분당선 서울구간 적용

① (제1핵심공약: 주택) 무너진 무주택가구 주거이동 안전망 복원

[핵심 내용]

○ **(핵심요지)** 전월세 시장 불안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부담 가능한 민간임대 지원을 결합**하겠다는 주거안정 공약. 즉, 공공임대·공공분양을 확대하고 빌라·다세대 등 민간임대와 주거비 지원을 병행해, 전월세 불안 속에서 무주택가구가 서울 안에서 안정적으로 이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안전망을 복원하겠다는 구상을 제시.

- **(문제인식)** 아파트·빌라 전세가격 상승, 전세매물 감소, 월세 비중 확대 등으로 무주택가구의 주거이동 안전망이 약화됐다는 진단
- **(핵심목표)** 2031년까지 **공공주택 약 13만 호** 공급과 **부담 가능한 민간임대 지원**
- **(공공주택 공급)** 공공임대주택 **12만 3,000호**, 공공분양주택 ‘바로내집’ **6,500호** 공급
- **(바로내집)** 토지임대형 6,000호, 할부형 500호로 구성
- **(SH임대주택 바로입주제)** 공실·입주 대기 구조를 개선해 **1만 호 공급 순증 효과**를 목표
- **(민간임대 지원)** 빌라·다세대 건설 매년 1만 호 지원, 정비사업 이주자용 빌라·다세대 5년간 10만 호 마련
- **(주거비 지원)** 보증금, 대출이자, 주거바우처 지원 확대
- **(월세 지원)** 중장년 월세 지원 신설, 청년 월세 지원 확대
- **(예산규모)** 총 **3조 8,600억 원**. 공공주택 13만 호 공급 3조 6,700억 원, 부담 가능한 민간임대 1,900억 원
- **(재원조달)** 주택진흥기금 등 기금, 주택사업특별회계, 공공분양 매각수익 활용

[공약 평가]

- **(공약의 구체성)** 공공임대주택 12만호, 공공분양주택 6,500호, SH임대주택 바로입주제 도입으로 1만호 공급, 빌라, 다세대 건설지원(1만호), 정비사업 이주자용 빌라, 다세대 10만호, 주거비 금융지원, 월세지원 등은 구체적 재원마련 수단이 부재한 상태에서 재정부담만 높이고, 땅값과 집값을 더 올리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정책임.
- 2026년부터 2031년까지의 연도별, 유형별 공공주택 공급량을 로드맵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한 점은 나름 긍정적이나, 재원 마련 대책이 매우 무책임함. 4년의 시장 임기(2026~2030년 상반기)까지 배정된 예산은 다 합쳐도 약 6,400억 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3조 2,200억 원(약 83.4%)이 2031년 단 한 해에 몰려 있음. 이는, 즉 2031년으로 떠넘기는 “기형적인 재정 계획”이며 사실상 임기 내 실현 불가능한 예산 배분 계획에 불과함.

- **(공약의 개혁성)** 청년층에 집중되었던 월세 지원을 중장년층까지 신설·확대하고, 정비사업 이주자를 위한 맞춤형 빌라를 제공하려는 시도는 취약계층의 주거를 촘촘히 보호하려는 개혁적 성격을 띤. 또한 개발 위주 정책 공약보다는 공공주택 확충하는 방향의 공약이 개혁적으로 평가할만하나, 이미 서울의 도시화가 완료되어 새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부지가 없는 서울시의 여건상,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은 잘못 수행하면 오히려 집값, 땅값 폭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SH 등 공기업 재정적자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음. 특히, 공급 물량의 대부분이 기존의 단순 매입임대 방식에 치중되어 있어, 고가 매입, 월세 낭비, 부동산 가격 상승 유발 우려가 커지면 재검토 필요.
- **(공약의 적실성)** 아파트 전셋값 6.8억 돌파, 전세 매물 50% 급감, 월세 비중 70% 돌파 등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의 뼈아픈 현실을 지적함. 무주택 시민들의 벼랑 끝에 내몰린 주거 문제를 최우선 현안(제1핵심공약)으로 선정하여 현재의 임대차 시장 문제와 부합하는 적절한 공약임.
 - 그러나 현재 임대차시장 불안정은 장기적인 주택수급 불안 요인이라기보다는, 양도세중과유예제도 종료로 인한 일시적 거래동결, 심리적 위축 등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는 임기 내 즉각적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는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정책임.
- **(후보자의 특성)**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존 재개발·재건축정책인 신통기획, 모아타운 활성화정책은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을 확대하기 더 어렵게 만드는 정책임. 이는 투자수요 유입시켜 아파트 가격을 더 올려야 실행가능한 정책인데, 주택공공성 강화와는 상충됨.
 - 특히 주택공급 정책은 임기 내 생색 내기식의 전시행정에 불과하고, 그에 따른 막대한 재정적 부담은 다음 시장에게 전하가는 “폭탄 돌리기” 식의 무책임한 정책 기획은 서울시장으로서 책임 있는 리더십을 심각하게 의심케 함. 또한 재원 조달을 위한 주택진흥기금 확대 계획(0.22조→2.2조) 역시 향후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해 당장의 실행력이 떨어짐.

○ **(총평)** 오세훈 후보자의 제1핵심공약인 ‘무너진 무주택가구 주거이동 안전망 복원’은 최근 전월세난과 속에서 서울시민의 가장 시급한 고충을 정확히 짚어냈다는 점에서 **공약의 적실성**이 매우 높으나, 임기 내 13만 호 공급이라는 거창한 목표와 달리 총예산 3조 8,600억 원 중 무려 83%인 3조 2,200억 원을 임기 종료 후인 2031년으로 떠넘기는 기형적인 무책임한 재정 계획을 갖고 있어, 공약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에 결함이 있음.

- (임기 후반에 몰린 무책임한 자원마련 대책) 2031년에만 3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본인의 임기 내에는 본격적인 재정을 쓰지 않겠다는 뜻과 같으며, 이는 공약의 신뢰도를 바닥으로 떨어뜨림.

→ 전체 예산 3.86조 원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7천억~8천억 원 수준으로 균등하게 재분배하는 현실적인 예산안으로 전면 재수정이 돼야 함. 시비 외에도 조기 재원 확보 방안이 명시돼야 함.

- (월세 지원에 대한 임대료 인상 우려) 주거비 금융지원(보증금, 월세 바우처)을 무분별하게 확대할 경우, 건물주들이 임차인 지원금 액수만큼 월세를 선제적으로 올려버리는 시장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임대료 인상 상한제를 준수하는 ‘착한 임대인’의 매물에만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주거 바우처’ 제도를 연동할 필요

㉔ (제2핵심공약: 교통) 20.8조원을 투입해 강북교통 대동맥 연결

[핵심 내용]

- (핵심요지) 강남과 강북 사이의 철도·도로 인프라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동북·서북·서남권 교통 인프라 15개 사업을 장기적으로 완성하겠다는 교통균형발전 공약. 즉, 강북·서남권의 철도와 도로 인프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8조 원을 투입해 지하고속도로, 도시철도, 도로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구상을 제시.
- (문제인식) 지하철역 1개당 인구가 강남은 2.6만 명인 반면 강북은 5.6만 명이고, 도시고속도로도 강북은 96km, 40% 수준에 그쳐 교통 인프라 격차가 크다는 진단
- (핵심목표) 강북 발전 전용재원을 확보해 강북의 경제거점 구축과 도시 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교통 인프라 확충
- (예산규모) 동북권·서북권·서남권 교통 인프라 15개 사업에 총 20.8조 원 투입
- (완료목표) 2027년부터 2037년까지 단계적 완료
- (도시고속도로 지하화) 2대 지하고속도로에 5.1조 원 투입: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남부순환지하고속도로
- (도시철도) 도시철도 7개 노선 조기 완공에 9.2조 원 투입: 동북선, 우이신설연장선, 면목선, 서부선, 강북횡단선, 목동선, 난곡선
- (기타) 나머지 6개 사업에 6.5조 원 투입: 강북권역 노후역사 개선, 국회대로 지하화, 서부간선도로 확장, 신림-봉천터널, 이수~과천 복합터널,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 등
- (재원조달) 4.8조 원 규모의 강북전성시대 기금 조성, 기존 철도·도로시설 예산 7.8조 원 대체 투자, 국비 3.1조 원, 민자 5.1조 원 활용

[공약 평가]

- **(공약의 구체성)** 구체적인 추진사업으로 지하고속도로 2개, 도시철도 7개 기타사업 6개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음. 대부분 그동안 사업이 집중되었던 강남 등 지역 이외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적절함.
 - 15개 세부 사업명과 투입 예산, 완공 목표 연도(2027~2037년)를 비교적 상세히 제시한 점은 긍정적이나, 연도별로 추진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특히, 20.8조 원의 재원 조달 계획이 매우 비현실적임. ‘강북전성시대 기금’ 4.8조 원 중 2.3조 원을 ‘공공용지 부지매각’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 시” 실현 불가능에 가까우며, 기존 철도·도로 예산 7.8조 원을 대체 투자하겠다는 발상은 서울시 다른 구역의 필수 유지보수 예산을 사실상 삭감하겠다는 의미와 같아 예산 배분의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음.
 - 물론, 제시한 공약사업의 추진 필요성은 높으나, 사업 가운데 일부는 경제성이 떨어져 추진 자체가 의심스런 사업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준공 이후 대규모 운영적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사업은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 판단됨. 전체적으로 20조가 넘는 사업비가 필요하며, 재원조달 방법에 있어서는 강북전성시대 기금마련이 가능할지 다소 의심되며, 적자 발생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한 민자투자도 다소 불분명하다 볼 수 있음.
- **(공약의 개혁성)** 강북 지역의 고질적인 인프라 소외 현상을 해결하여 주민 삶의 질을 높여주는 방향성은 바람직함. 그동안 낙후된 지역인 강북에 대해 교통인프라 개선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발전을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발전적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볼 수 있음.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해 직접적으로 강북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주민들의 이동권을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유효한 정책임.
 -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하 고속도로’를 뚫는 불필요한 토건사업이자 혈세 낭비에 불과함. 모빌리티 빅데이터를 활용한 노선 효율화나, AI를 활용한 지능형 교통 체계(ITS) 고도화 등 소프트웨어적인 개혁 없이 콘크리트를 붓는 20세기형 개발 모델에 그침.
- **(공약의 적실성)** 강북지역 주민의 상대적인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이라 평가함. 강북의 지하철역 당 인구수 부담과 도로망 부족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겪는 가장 시급한 현안임. 동북선, 서부선, 강북횡단선 등 오랜 기간 지연된 숙원 사업들을 조기 완공하겠다는 약속은 지역주민의 욕구와 교통 환경 개선이라는 정책 환경에 정확히 부합함.
 - 그러나 상당수 사업의 시행 가능성에 의구심이 듭. 물론, 공약사업은 이미 추진 계획하고 있거나 과거에 검토한 적이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으로 지역주민에게는 지역적인 현안이 되는 사업으로 볼 수 있음. 다만, 이사업들이 모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냐에 대해서는 의문

점이 있음.

- 도시철도노선 확충으로 대중교통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친환경적이라 평가되지만, 지하고속도로 건설 및 지하도로 건설의 경우 도로를 늘리고 차량교통량을 증가시켜 환경친화적이지 않음.
- **(후보자의 특성)**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를 보이거나, 20조 원이 넘는 막대한 토건사업을 임기(4년)를 훨씬 초과하는 2037년까지의 장기 로드맵으로 제시한 것은 선언적 포퓰리즘에 가까움. 특히, 민자 유치 5.1조 원과 사전협상 공공기여 2.5조 원 등 민간 자본과 이해관계자를 조율해야 하는 복잡한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거버넌스 리더십이 보이지 않음.

○ **(총평)** 오세훈 후보자의 제2핵심공약인 ‘강북교통 대동맥 연결’은 강남·북 인프라 격차 해소라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현안 적실성은 높음. 그러나 총 20.8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공공부지 매각이나 기존 예산 전용 등 불확실한 재원으로 충당하려 해 재정 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짐. 특히 스마트 모빌리티 등의 비전 없이, 단순히 지하철도와 철도 신설 등 과거의 토건(하드웨어) 중심 개발사업에만 머물러 있어 개혁성은 부재.

- **(불확실한 자원과 인프라 공동화 우려)** 기존 시설에 투자되던 7.8조 원을 강북 신규 인프라에 전용할 경우, 기존 노후 철도 및 도로의 유지보수 공백이 발생해 시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음.
 - 무리한 부지 매각이나 예산 전용 대신, 교통량 예측 모델을 통해 15개 사업 중 데이터 기반 투자 대비 효용(ROD)이 가장 높은 5개 핵심 사업으로 대상을 압축해 임기 내 구체적 예산 집행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설계돼야 함.
- **(민자 사업에 대한 감시 체계 부재)** 서부선 등 대규모 민자 사업은 향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문제나 과도한 통행료 산정으로 시민의 경제적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함.
 - 교통 공약 추진 기구 내에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민자사업 감시 위원회”를 신설하여, 통행료 수요 예측 데이터의 조작이나 편향성을 검증하고, 민자 적격성 심사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함.

㉓ (제3핵심공약: 교통) 기후동행카드를 ‘서울기후동행패스’ 로, 교통복지 확대

[핵심 내용]

○ **(핵심요지)**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정부의 K-패스와 통합하고, 고령층·광역교통 이용자에게 교통비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공약. 즉, 기후동행카드를 K-패스와 통합해 국고지원을 확보하고, 70세 이상 어르신과 GTX-A·신분당선 이용자까지 혜택을 넓히겠다는 구상을 제시.

- **(문제인식)** 기후동행카드가 2026년 1월 ‘모두의 카드’ 도입으로 전국화된 만큼, 정부 K-패스와 결합해 시민 교통혜택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
- **(핵심방향)**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와 정부 K-패스를 통합해 단일 인증·정산 시스템 마련
- **(주요과제)** 중앙정부와 요금체계·결제 규격 표준화, 재원배분, 국고보조금 문제 협의
- **(교통복지 확대)** K-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월 15회 미만 이용자 중 70세 이상 어르신 약 50만 명에게 교통비 100% 지원
- **(적용범위 확대)** GTX-A, 신분당선 서울구간에 기후동행패스 월 정액제 6.2만 원 적용
- **(기존 서비스 유지)** 청년 연령 연장, 청소년 권종, 한강버스·따릉이 연계 할인, 관광객 단기권 등 기존 기후동행카드 특화서비스 유지
- **(시행계획)** 중앙정부와 협의 후 내년부터 시행 목표
- **(소요재원)** 70세 이상 어르신 지원 연 525억 원, GTX-A 연 114억 원, 신분당선 연 351억 원 추산
- **(재원조달)** K-패스와 통합할 경우 국고지원 가능액을 600억~1,000억 원 정도로 추산

[공약 평가]

- **(공약의 구체성)** 공약의 내용은 기존 사업의 확장이라 구체적이고 완결적임 (정원호 후보의 ‘30분 통근도시 실현’ 공약의 일부내용과 거의 유사함).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 소요 재원 산출 근거(탑승객 수 × 지원 단가)가 비교적 명확함. 어르신 지원(연 525억 원), GTX-A(연 114억 원), 신분당선(연 351억 원) 등 세부 항목별 예산이 육하원칙에 맞게 산정되어 유권자가 정책 비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음. 다만, 연도별 추진 계획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음.
 - 경제적 약자에게 교통이용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좋은 목표이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과정 등이 필요함. 제시한 공약 내용의 대부분이 서울기후동행패스 사용 시에 할인, 무료승차 지원 등으로 교통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비용과 함께 전체적인 재원 마련에 문제가 있음.
- **(공약의 개혁성)** 청년 연령 연장(만 39세→42세), 청소년 권종 유지, 어르신 100% 지원 등 취약계층의 이동권(주민 권익)을 강화한다는 점은 긍정적임. 공약 자체만으로는 지역주민의 삶에 좋은 영향을 줌.
 - 그러나 고령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하여 공공교통에 대한 할인, 무료승차 지원에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음. 때문에 지속적인 발전과 운영을 위한 비전이 약하다 볼 수 있음.

- 또한 국토부의 K-Pass에 편승해 기존 요금제(기후동행카드)의 이름만 바꾸고 혜택을 조금 넓힌 수준에 불과하여, “기후동행”이라 부를 만한 새로운 정책적 비전이나 기술적 혁신 모델은 아님.
- **(공약의 적실성)** 고물가 시대에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는 수도권 지역주민들의 가장 직접적인 관심사임. 물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서민들의 삶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중교통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정책은 지역현안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음.
- 특히 경기도권 출퇴근 수요가 많은 GTX-A와 신분당선을 정액권에 포함시킨 것은 서울과 수도권을 오가는 광역 통근자들의 교통비 절감 욕구를 잘 포착한 공약임. 많은 서울 외곽지역 및 경기도 주민들이 서울 중심부로 출퇴근하고 있으며, 서민인 이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지역 주민의 불만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음.
- 또한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것은 친환경적인 정책이라 볼 수 있음.
- 그러나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교통운영기관의 적자와 이에 대한 정부보고와 서울시 분담이 조정될 수 있을 때 실현이 가능할 것임. 현재 서울교통공사의 만성적인 적자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서비스확대는 자칫 공공교통서비스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
- **(후보자의 특성)** 예산 산출은 구체적이거나, 재원 조달의 핵심을 ‘중앙정부와 협의 시 국비 600~1,000억 원 지원 가능’이라는 불확실한 전제를 두고 있음. 만약, 정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국고 보조를 거부하거나 애시당초와 같이 ‘K-패스 통합(정산 시스템 표준화)’에 이재명 정부가 난색을 표할 경우, 이를 자체 시비로 감당할 “플랜 B”가 전혀 없음. 이는 지자체장의 정치·자립적 리더십이나 재무적 책임성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임.

○ **(총평)** 오세훈 후보자의 제3핵심공약인 ‘서울기후동행패스’는 기후위기 대응과 시민 교통비 절감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잘 부합하여 적실성이 높음. 특히, 70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지원과 GTX-A 편입 예산을 구체적으로 산출한 점은 구체성 측면에서 긍정적임. 그러나 ‘K-PASS와의 통합’이라는 핵심 전제가 이재명 정부와의 합의 및 국비 지원(최대 1,000억 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협의 실패 시 공약 전체가 좌초될 위험을 안고 있음.

- (중앙정부 의존형 재원 계획, 플랜 B 부재) 국고 지원금을 기정사실로 하고 예산을 짰으나, 정권 교체나 세수 부족 등의 변수로 국비 확보가 무산될 경우, 어르신 및 청년 할인 혜택이 연쇄적으로 축소되거나 중단될 위험이 높음.
- K-패스 통합 실패 시에도 공약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독자적 서울 재원 마련과 ‘기후동행’에 걸맞는 혁신적인 방안(예: 탄소배출권 수익 연계 등)을 공약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로드맵도 함께 제시할 필요

3) 김정철 서울시장후보 / 개혁신당

구분	공약명	핵심 내용
제1핵심공약	(공공AI) AI 행정·자동복지로 ‘찾아오는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복지 • AI 인허가 1차검토 • 수의계약 제로 • AI 행정포털 • 복지 사각지대 선제 발굴
제2핵심공약	(주택) 규제혁신으로 만드는 ‘부담가능한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남·강북 맞춤형 규제 완화 • 공공조합장 • 분담금 시뮬레이터 • 역세권 1인가구 규제 프리존 • 저층주거지 보존형 정비
제3핵심공약	(교통) 출퇴근 30분 단축 ‘막힘없는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호선 우회 BRT, CBTC 운영 고도화 • 광역 신호 통합 • 공공기관·학교 주차 개방 • 준공영제 회계 투명성 • 교통약자 통합배차

① (제1핵심공약: 공공AI) AI 행정·자동복지로 ‘찾아오는 서울’

[핵심 내용]

- **(핵심요지)** 시민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복지·행정 구조를 바꿔, AI가 위기 신호와 행정 데이터를 분석해 필요한 서비스를 먼저 찾아 연결하는 행정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 즉, AI를 활용해 복지·인허가·계약·민원을 통합 관리하고, 시민이 신청하지 않아도 필요한 행정서비스가 먼저 연결되는 ‘찾아오는 행정·자동복지’ 공약.
- **(문제인식)** 복지제도는 존재하지만 시민이 몰라서, 신청 절차가 어려워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혜택에서 빠지는 문제가 있다는 진단
- **(핵심목표)** 신청주의 행정을 타파하고, 행정이 시민에게 먼저 찾아가는 자동복지·AI 행정체계 구축
- **(자동복지)** 단전, 보험료 체납, 주거이동 등 위기 신호를 AI가 감지해 신청 없이 복지 서비스를 자동 연결
- **(AI 인허가)** 표준화된 인허가 사안은 AI가 1차 검토해 공무원 재량 개입을 줄이고 처리기간 단축
- **(계약·조달 개혁)** 수의계약 제로, AI 계약감시를 통해 공공조달을 경쟁입찰 원칙으로

전환하고 낙찰가 이상치 등을 실시간 감지

- **(행정포털)** 민원·복지·인허가·교통을 단일 시민 계정으로 통합하는 **서울 AI 행정포털** 구축
- **(사각지대 발굴)** 독거노인, 1인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 등 위기가구를 AI로 자동 감지하고 동주민센터 전담요원과 연결
- **(로드맵)** 2026년 설계·시범 → 2027년 자치구 시범·분야 확대 → 2028년 25개 자치구·10개 분야 확대 → 2029년 전면 운영·고도화
- **(예산규모)** 4년간 총 **3,500억 원**, 연평균 875억 원
- **(재원조달)** 시 정보화·스마트도시 예산 재편, 수의계약 절감분 재투입, 국비 매칭, 민자·산업 협력 활용
- **(기대효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수의계약·예산누수 축소,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청탁·재량 구조 차단, 시민 신뢰 회복

[공약 평가]

- **(공약의 구체성)** 타 후보들의 거대 토건 공약들과 달리, 예산 산출 근거와 재원 마련 대책이 매우 치밀하고 구체적임.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 시스템 단가, 조달청 e조달 운영비 등을 준용하여 총 3,500억 원의 예산을 현실적으로 추계했음. 특히, 클라우드·SaaS 도입(민자 10%) 및 수의계약 절감분 재투자 등 IT 프로젝트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한 예산 배분 계획이 돋보임.
- **(공약의 개혁성)** 서울시 내부 행정혁신(개선)을 제1핵심공약으로서 유권자들에게 내세울 만한 공약의 개혁적 가치나 다양성은 적음. 물론, 전통적인 신청주의 행정복지에서 AI 시대에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점에 대해서는 일부 긍정 평가 할 수 있음.
- **(공약의 적실성)** 예컨대, ‘송파 세 모녀 사건’ 처럼 복지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문제와, 관급 공사에서의 전관예우·수의계약 비리는 한국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핵심 병폐임. AI를 활용한 선제적 위기가구 발굴과 공공조달 경쟁입찰 원칙 전환은 AI 시대에 사회적 요구에 매우 부합함.
- **(후보자의 특성)** 거창한 하드웨어(건물, 도로) 건설 대신, 3,500억 원이라는 비교적 효율적인 예산으로 서울시 행정의 ‘소프트웨어(운영 체제)’를 전면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철학에서 행정가로서의 높은 전문성과 합리성이 엿보임. 데이터 통합과 법령 정비(POC) 등 실무적인 허들을 로드맵 1차 년도에 배치한 점도 실행 리더십을 증명함.

○ **(총평)** 김정철 후보자의 제1핵심공약(AI 행정·자동복지로 '찾아오는 서울')은 신청주의 복지의 사각지대와 행정 재량권 남용이라는 고질적 병폐를 AI 기술로 타개하려는 매우 혁신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나, 서울시 내부 행정혁신(개선)을 유권자들에게 제1핵심공약으로서 내세울 만한 개혁적 가치나 서울시장 공약으로서 다양성은 부족. 다만, 산출 근거가 명확한 예산 계획과 연도별 로드맵은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높음. 그러나 방대한 시민 데이터 수집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와 알고리즘 편향성 문제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함께 보완돼야 함.

- **(빅 브라더 우려 및 데이터 주권 침해)** 단전, 보험료 체납, 주거 이동 등 위기 신호를 감지하려면 서울시가 시민의 극도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상시 수집하고 분석해야 함. 데이터 유출이나 국가 권력에 의한 과도한 감시망으로 변질될 위험이 큼.
 - 공약 내에 '서울시 AI 데이터 인권 조례' 제정 및 철저한 가명정보(비식별화) 처리 원칙을 명시해야 함.
 - 또한, 민간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AI 알고리즘 시민감시위원회'를 설치하여 데이터 오남용을 상시 통제해야 함 (예: 시민단체의 AI시민감시단과 협력).
- **(알고리즘의 편향성과 결정의 투명성 부재)** AI가 수의계약 이상치를 감지하거나 인허가를 1차 검토할 때, 학습된 과거 데이터 자체가 편향되어 있음이면 억울한 피해자(블랙리스트)가 발생할 수 있음.
 - AI의 판단 근거를 시민에게 설명할 수 있는 '설명 가능한 AI(XAI, eXplainable AI)' 기술 도입을 의무화하고, AI의 1차 반려 결정에 대해 시민이 쉽게 이의를 제기하고 인간(공무원)의 재심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구제 절차를 세부 프로그램에 추가해야 함.
- **(디지털 소외계층의 접근성 역차별)** '서울 AI 행정포털'로 모든 민원과 복지를 단일 계정으로 통합할 경우, 스마트폰이나 PC 활용이 어려운 독거노인 등은 오히려 행정 서비스에서 철저히 소외될 수 있음.
 - AI 기술은 대시민용 포털뿐만 아니라 일선 공무원의 업무를 돕는 데 집중돼야 함. '동주민센터 전담 요원'이 AI의 분석 결과를 태블릿 등으로 제공받아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O2O(Offline-to-Online) 대면 서비스 예산 및 인력을 현재 계획(100명 수준)보다 크게 확충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음(최소 3배 이상).

② (제2핵심공약: 주택) 규제혁신으로 만드는 '부담가능한 서울'

[핵심 내용]

○ **(핵심요지)** 서울 주거 문제를 단순한 공급 부족이 아니라 수요에 맞지 않는 공급, 정비사업 분쟁, 지역별 규제 불균형, 1인가구 주거 불안의 문제로 보고, 규제와 정비사업 구조를 바꿔 ‘살 수 있는 집’을 늘리겠다는 구상. 즉, 강남·강북 맞춤형 규제완화, 공공조합장과 분담금 투명화, 역세권 1인가구 주택 공급을 통해 ‘공급 숫자’가 아니라 실제 시민이 감당 가능한 주택을 늘리겠다는 주거·규제개혁 공약.

- **(문제인식)** 서울 주거 문제는 단순 공급 부족이 아니라, 30대·1인가구가 살 집을 찾지 못하고 정비사업이 조합 분쟁과 소송으로 장기간 멈춰 있는 구조적 문제라는 진단
- **(핵심방향)** ‘몇 채를 공급했는가’ 보다 누가 살 수 있는 집인가를 기준으로 주택정책을 전환
- **(맞춤형 규제완화)** 강남은 글로벌 기업·스타트업 입주 규제 철폐, 강북은 정비사업 가속을 위한 인센티브 패키지 추진
- **(기적의 재건축)** 공공조합장 파견, 분담금 시뮬레이터, 등기부 연동 동의서, 블록체인 기반 총회 기록, 기준시점 조기 설정 등으로 정비사업 법적 분쟁 50% 감축
- **(1인가구 주거대책)** 역세권 1인가구 규제 프리존을 지정해 소형주택 공급 조건부 용적률 인센티브와 준공공형 임대주택 패스트트랙 추진
- **(행정체계)** 국장급 1인가구 정책관을 신설해 청년·중장년·노년 1인가구를 생애주기별로 통합 관리
- **(저층주거지 대책)** 저밀도 저층주거지를 보존·개량·정비가 결합된 방식으로 공급해 아파트 일변도 개발에서 탈피
- **(로드맵)** 2026년 조례 정비·시범지구 5곳·공공조합장 10개 구역 → 2027년 10곳·30개 구역 확대 → 2028년 전 자치구 적용·60개 구역 확대 → 2029년 효과 평가 및 전 정비구역 표준화
- **(예산규모)** 4년간 2조 7,200억 원. 시 일반회계 부담은 7,000억 원으로 제시
- **(재원조달)** SH공사 사업비 1조 1,200억 원, 시 일반회계 7,000억 원, 국비 4,200억 원, 민간 정비사업 분담·민자 4,800억 원 등으로 구성
- **(기대효과)** 1인가구 시대에 맞는 소형·역세권 주택 공급, 강남·강북 규제격차 완화, 정비사업 분쟁 감소, 평균 사업기간 단축, 청년·부모세대의 서울 거주 가능성 확대

[공약 평가]

- **(공약의 구체성)** 공공조합장제도를 통한 법적분쟁 감축, 분담금 시뮬레이터, 공공성 강화 예측가능성 부여 등 공약의 구체성 면에서 좋은 평가 가능함.
- 예산 면에서도, 산출 근거를 보면 4년간 2조 7,200억 원의 재원을 시비(7,000억), SH 사업비(1.2조), 민자(4,800억), 국비(4,200억)로 정교하게 분배했음. 막연한 국비 의존이 아닌, SH의 기존 자본을 지렛대로 활용하고 회계상 직접 부담을 최소화한 예산 배

분 계획이 매우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음.

- 다만, 주민간 이해관계를 제대로 조율할 수 있는 공공조합장을 누가 할 것인지, 조합원들에게 수용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한 비판 가능성이 있음.
- **(공약의 개혁성)** 재개발·재건축을 가로막는 핵심 병목이 인허가 속도가 아닌, ‘분담금 및 비리 분쟁’ 임을 정확히 진단함.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조합장 파견’과 ‘블록체인 기반 의결 시스템’이라는 파격적인 제도를 도입한 것은 재개발·재건축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획기적인 개혁임. 또한, ‘1인가구 정책관’ 신설을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겠다는 비전도 지속가능발전에 부합함. 한편 부동산 규제 완화, 규제 프리존 등의 공약은 개발이익 환수방안 강화 조치 없이 갈 경우, 부동산 투기 조장 등의 우려가 있어 보완이 필요함.
- 다만, 1~2인 가구와 신혼부부 맞춤형 주택 역세권 공급을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주차장 규제완화, 준공공형 임대주택 패스트트랙 등은 도시 과밀화 악화 우려,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수단(공공성 확보방안)의 구체성이 조금 더 보장되면 좋겠다는 의견임.
- **(공약의 적실성)** 서울 전체 가구의 40%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주거 불안과, 강남-강북 간 규제 불균형은 현재 가장 시급히 해결이 돼야 할 지역 현안임. 특히, 분담금 공사비 감감이 증액으로 인해 곳곳에서 공사가 중단되는 현 상황에 ‘기적의 재건축 6대 액션’은 유권자의 절실한 욕구를 정확히 담아냈음.
- 저밀도 저층주거지 보존형 정비(보존, 개량 정비 결합, 아파트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다층적 공급모델로서 공약의 실행가능성, 적실성 등 측면에서 좋은 평가 가능함.
- 다주택자 규제 일변도가 아닌, 착한 임대인 유도를 통한 전세물량 확보, 장기임대 시스템 구축, 월세세액 공제 등은 큰 예산투입 없이 당장 실행가능한 좋은 공약이나, 다주택자에게 개발이익이나 자산 쏠림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함께 필요함.
- **(후보자의 특성)** 다른 후보자들과 달리, 공급 만능주의나 규제 철폐 일변도의 정치적 구호에서 벗어나, 분쟁 구조 자체를 해체하려는 실용적이고 전문가적인 리더십이 돋보임. 예산의 합리적 재구조화 능력과 1인 가구 등 사회적 변화를 정책 시스템(국장급 정책관 신설)으로 끌어안으려는 행정적 책임이나 특성이 높음. 형사·금융 전문 변호사로서 도시 행정 및 부동산 관련 법률과 제도, 실무 경험에 근거하여 매우 현실적이고 실행가능한 공약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거대 양당 타 후보들과의 정책 경쟁에 널리 활용되고 결합되면 좋겠다는 의견임.

○ **(총평)** 김정철 후보자의 제2핵심공약(규제혁신으로 만드는 ‘부담가능한 서울’)은 단순한 “물량 밀어내기식 공급”을 넘어, 정비사업 지연의 근본 원인인 ‘조합 내부 분쟁’을 해소하고, 1인 가구 증가라는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한 우수 공약임. 특히 블록체인 기반의 의결 시스템과 분담금 시뮬레이터 도입은 행정의 객관성을 높이는 훌륭한 수단임. 전반적인 공약의 완결성은 있지만, “고령층 조합원의 디지털 소외 문제”나 공공조합장 파견에 따른 기존 기득권의 반발을 제어할 세밀한 거버넌스가 보완되어야 함. 덧붙여 부동산 규제 완화, 규제 프리존 등의 공약은 개발이익 환수방안 강화 조치 없이 갈 경우, 부동산 투기 조장 등의 우려가 있어 보완이 필요함.

- **(고령층 조합원 디지털 소외)**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상당수는 60대 이상의 고령층임.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 동의 및 투표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스마트폰이나 IT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의 참여가 제한되어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음.
 - 순수 온라인 방식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각 구역 주민센터나 조합 사무실에 ‘오프라인 블록체인 투표 키오스크’를 병행 설치 등 고령층을 배려해야 함. 또한 지문이나 안면인식을 통해 본인 인증을 돕고, 음성으로 의결 과정을 안내하는 디지털 포용 방안까지 세부 실행 프로그램에 추가될 필요.
- **(공공조합장 낙하산 논란과 기득권 조합원 카르텔 저항)** 서울시가 공공조합장(전문가팀)을 파견하여 사업을 주도하려 할 때, 기존 정비업체나 조합 임원들이 “관치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소송전으로 비화할 위험이 있음.
 - 공공조합장의 권위를 사람(공무원)이 아닌 객관적인 “데이터”에서 찾아야 함. 공약에 명시된 ‘분담금 시뮬레이터’를 “오픈소스 기반 AI 정비사업 투명성 대시보드”로 격상하여, 시민 누구나 시공사의 공사비 단가와 조합의 회계 흐름이 적정한지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데이터 권력을 조합원에게 완전히 이양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함.

㉓ (제3핵심공약: 교통) 출퇴근 30분 단축 ‘막힘없는 서울’

[핵심 내용]

○ **(핵심요지)** 새 지하철 노선을 대규모로 신설하기보다, 기존 교통망의 운영 효율을 높이고 9호선 혼잡·도로 신호·주차·교통약자 이동 문제를 동시에 개선하겠다는 구상. 즉, 9호선 우회 BRT와 철도·도로 신호체계 고도화, 주차공간 개방, 교통약자 배차 통합을 통해 새 노선 건설보다 빠르게 시민의 출퇴근 시간을 줄이겠다는 교통 운영혁신 공약.

- **(문제인식)** 9호선 혼잡, 자치구별로 분절된 도로 신호체계, 버스 준공영제 회계 불투명, 장애인 콜택시 장시간 대기 등으로 시민 출퇴근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는 진단

- **(핵심방향)** 새 노선 건설 중심의 대형 토목보다 BRT·CBTC·AI 신호·주차개방·배차통합 등 운영기술을 활용해 임기 내 체감 효과를 내겠다는 구상
- **(생생버스, 9호선 우회 BRT)** 강서-여의도-강남 약 30km 전용차로 BRT를 구축해 9호선 본선 혼잡 분산
- **(CBTC 운영 고도화)** 9호선 등 도시철도 통신기반 열차제어 시스템을 고도화해 침두시 열차 간격 단축과 수송능력 증대
- **(신호체계 광역 통합 운영)** 25개 자치구로 나뉜 도로 신호를 광역 단일 운영체제로 통합하고 스마트교차로·C-ITS 표준 적용
- **(공공기관·학교 유휴공간 주차 개방)** 야간·주말·공휴일 시간 단위 개방으로 자치구별 만성 주차난 완화
- **(버스 준공영제 회계 투명성)** 표준운송원가와 재정지원금을 실시간 공개하고 외부 회계검증·성과연동 강화
- **(교통약자 동행 배차)** 장애인 콜택시와 저상버스 통합 배차 시스템을 도입해 교통약자 대기시간 단축
- **(예산규모)** 4년간 9,000억 원. 이 중 9호선 우회 BRT가 4,800억 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CBTC 800억 원, 신호체계 광역통합 1,000억 원 등이 제시
- **(기대효과)** 9호선 혼잡 완화, 도로 흐름 개선, 주차난 완화, 버스 재정 투명성 강화, 교통약자 이동권 개선, 출퇴근 시간 단축

[공약 평가]

- **(공약의 구체성)** 공약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음. 총 9,000억 원의 예산을 6개 세부 사업으로 나누고, 청라·세종 BRT 단가 및 서울도시철도 CBTC 도입 사례 등 검증된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비용을 추계한 점이 돋보임. 시 일반회계 교통예산 재편(50%)과 국비·민자 매칭 비율이 현실적이며, 4년간의 로드맵도 설계-시범-적용-안정화 단계로 매우 촘촘하게 짜여 있어 공약의 완결성이 뛰어난. 전체 재원 규모가 후보자들의 교통공약 가운데 가장 적은 예산으로 확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됨.
 - 해법으로 제시한 내용이 운영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음.
- **(공약의 개혁성)** “지하철 노선을 더 파겠다”는 과거의 개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기존 노선의 신호 체계를 고도화하여 수송 능력을 끌어올리는 소프트웨어적 발상의 전환이 개혁적임. 다양한 효율화 운영방안 제시를 통해 출퇴근 교통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은 추가적인 인프라 건설을 제시하는 다른 후보자들과 차별화된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불투명했던 버스 준공영제의 표준운송원가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저상버스 통합 배차를 전면에 내세운 점은 시민과 약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정책임.

- 주민들의 출퇴근시간 이동권이 강화된다고 볼 수 있음. 출퇴근시간 단축으로 서울외곽지역 주민들의 삶에 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공약의 적실성)** 강서-여의도-강남을 잇는 9호선의 200% 혼잡도와 자치구별로 끊기는 신호 체계는 서울 외곽지역에서 매일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갉아먹는 최우선 과제임. 출퇴근 콩나물 시루같은 지하철과 버스의 문제 자체가 서울시민의 불만가운데 하나임. 대중교통 활용을 촉진시키고, 새로운 인프라를 건설하지 않고 효율적인 운용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은 친환경적이라 평가할만함.
- 공약의 내용, 재원 등에 큰 문제가 없어 실현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기대되나, 기존 교통망과의 연계와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버스와의 역할분담 등은 과제로 평가됨.
- 기타 학교·공공기관 유희공간 개방을 통한 주차난 해소 역시 지역사회의 시급한 욕구를 정확히 짚어냈으며, 현재의 교통 환경과 완벽히 부합함.
- **(후보자의 특성)**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힘든 1.5조 원짜리 새 노선 건설 대신, 9천억 원으로 5개 노선의 효과를 내겠다는 “효율성과 가성비” 중심의 기획력은 행정가로서의 높은 전문성을 보여줌. 25개 자치구로 분절된 신호 체계를 광역 단위로 통합하겠다는 강력한 거버넌스 조정 의지도 긍정적임.

○ **(총평)** 김정철 후보자의 제3핵심공약(출퇴근 30분 단축 '막힘없는 서울')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낡은 토목 공사(새 철도망 구축) 대신, 기존 인프라에 통신 기반 제어(CBTC)와 지능형 교통 체계(C-ITS) 등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최적화' 를 접목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매우 실용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임. 산출 근거가 명확해 구체성도 매우 높음. 그러나 실현 가능성 면에서, 신호시스템 통합, 주차장 개선 등 운영 시스템 효율 개선만으로 과연 출퇴근 시간 30분 단축이 실제 가능한지 의문이며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음. 또한 자율주행 시대 진입을 고려한 BRT 시스템의 첨단화와 교통 데이터 민영화 방지를 위한 시민 감시 거버넌스까지 구체적으로 보완이 돼야 함.

- **(평면적 BRT의 한계와 자율주행 aBRT 비전 부재)** 강서-강남 30km 구간에 일반적인 BRT 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9호선 수요를 획기적으로 분산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자율주행 BRT(aBRT) 및 AI 기반 군집 주행(Platooning) 기술 도입을 추가할 필요. 출퇴근 첨두시간대에는 여러 대의 버스가 데이터를 통해 기차처럼 간격 없이 붙어서 달리는 기술을 적용해야 진정한 의미의 수송 능력 극대화가 가능함.
- **(C-ITS 및 신호 통합 과정에서의 방대한 교통 데이터 독점 우려)** 25개 자치구의 신호를 통합하고 스마트 교차로를 운영하게 되면, 서울 시민들의 이동 동선, 차량 식별 데이터 등 엄청난 양의 모빌리티 빅데이터가 중앙 서버로 집중됨. 이 데이터가 민간 운영사나 플랫폼 기업에 독점될 위험이 있음.

- “(가칭) 서울시 오픈 모빌리티 데이터 댐”을 구축하여 비식별화된 교통 데이터를 스타트업과 연구기관에 투명하게 개방해야 함. 아울러 외부 독립 기구나 일반 시민들이 교통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 조례” 제정을 공약에 포함할 필요
- (교통약자 통합 배차 AI 알고리즘의 편향성) 콜택시와 저상버스를 통합 배차할 때, 단순히 ‘대기 시간’만 최소화하는 알고리즘을 짜면 휠체어 탑승 여부나 중증도에 따른 세밀한 배려가 누락되어 특정 약자가 역차별을 받을 수 있음.
 - 배차 알고리즘 설계 시 교통약자와 복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AI 모델 검증 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계적인 효율성뿐만 아니라 인권과 편의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착한 AI 배차 시스템”을 완성할 필요.

4) 권영국 서울시장후보 / 정의당

구분	공약명	핵심 내용
제1핵심공약	(사회복지) 생활필수재 공공보장으로 기본서비스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교통·의료·먹거리 4대 기본서비스를 서울시 책임 보장 • 공공임대 10만 호 • 대중교통 무상화 • 병원비 상한제 • 공공조식
제2핵심공약	(노동) 모든 시민이 노동권의 주체가 되는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인 미만·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보호 • AI 전환기금 • 주4일제 • 기후수당 • 공공부문 직고용 • 노동부시장 신설
제3핵심공약	(사회복지) 공공돌봄 도시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사회서비스원 복원 • 공공통합돌봄센터 • 서울 간병지원센터 • 돌봄 노동 가이드라인 • 공공실버주택 • 돌봄보안관

① (제1핵심공약: 사회복지) 생활필수재 공공보장으로 기본서비스 보장

[공약 내용]

○ **(핵심요지)** 주거·교통·의료·먹거리처럼 시민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영역을 시장에만 맡기지 않고, 서울시가 공공서비스로 보장해 생활비 부담과 불평등을 줄이겠다는 구상. 즉, 주거·교통·의료·먹거리라는 생활필수 영역을 서울시가 공공서비스로 책임져, 시민의 생활비를 줄이고 불평등을 완화하겠다는 기본서비스 보장 공약.

- **(문제인식)** 주거비·교통비·의료비·식비 등 생활필수 지출이 가계 부담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서울시민의 생활비 부담이 한계에 달했다는 진단
- **(핵심방향)** 주거·교통·의료·먹거리 4대 분야를 시민의 기본권으로 보고, 서울시 책임의 기본서비스 보장 체계 구축
- **(제도기반)** 서울시 기본서비스 보장 조례 제정, 기본서비스 보장위원회 구성, 소득분위별 생활비 절감 효과 목표 수립
- **(주거 보장)** 공공임대주택 20% 확보를 장기 목표로 임기 내 10만 호 확대, 서울형 표준임대료·관리비 기준 도입, 세입자 계속거주권 보장
- **(교통 보장)** 아동·청소년·어르신부터 대중교통 무상화 시작, 마을버스·시내버스부터 단계적 확대, 2030년 대중교통 완전 무상화 목표, 버스 완전공영제 추진
- **(의료 보장)** 공공병원·달빛어린이병원 확대, 25개 자치구 공공의료 공백 해소, 아동·청소년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서울형 동네주치의 도입
- **(먹거리 보장)** 청년·1인가구·맞벌이·새벽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공공조식 제공, 저소득층 무상, 일반 시민에게 ‘천원의 아침밥’ 지원, 공공식당·공유부엌 확대
- **(로드맵)** 1년차 조례 제정·공공임대 2만 호 착수·아동청소년 교통무상화 → 2년차 어르신 교통무상화·공공병원 확충 → 3년차 시내버스 전 시간대 무상화 확대 → 4년차 공공임대 10만 호 완료·대중교통 무상화 기반 완성
- **(예산/재원)** 4대 기본서비스 보장 예산은 4년 합계 약 6조 3,372억 원으로 제시. 재산세 탄력세율 조정, 기존 전시행정 예산 구조조정, 주택기금·녹색채권, 광역교통시설부담금·교통유발부담금 조정, 국비 확보 등을 재원으로 제시
- **(기대효과)** 소득 하위 30% 가구 기준 월평균 30만~50만 원의 생활비 절감, 불평등 완화, 공공서비스 신뢰 회복, 대중교통 무상화를 통한 탄소 감축, 지역경제 활성화

[공약 평가]

- **(공약의 구체성)** 4년간 총 6조 3,372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의 연도별, 분야별(주거·교통·의료·먹거리) 배분 계획이 나름 명확히 제시되어 있음. 또한 기존 전시행정 예산 삭감 및 민간 버스회사에 투입되던 준공영제 적자 보전금(연 5,000억 원)을 무상화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재원 마련 논리도 구체적임. 그러나 막대한 예산

의 객관적인 추계, 구체적인 근거, 재원 마련 방안은 부재해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해 구호에만 그칠 가능성이 높음.

- 한편, 2년 차 공공병원 3개소 신설을 제시했으나, 어떤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는 병원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 제시되지 않아 그 위상이 불분명함. 서울형 동네주치의제의 정확한 상이 무엇인지 제시하지 않았고, 이를 위한 서울시의 역할과 지원방안이 제시되지 않음.

○ **(공약의 개혁성)** 다만, 잔여적, 선별적 복지를 넘어 시민의 삶을 구성하는 필수재를 공공이 직접 보장하는 ‘기본서비스’로 규정한 것은 사회 불평등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는 최고 수준의 개혁임. 특히, 구조적 적자를 내면서도 회계가 불투명했던 버스 준공영제를 폐지하고 완전 공영제로 전환하겠다는 비전은 시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개혁적 접근임.

- 특히, 서울시 산하 공공병원 확충을 통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공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여 민간의료 중심의 서울시 의료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점은 개혁적임.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률을 지자체 차원에서 아동과 청소년 등 취약층의 의료비 부담부터 줄이겠다는 방안은 중앙정부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선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으로 높이 평가할 수 있음.

○ **(공약의 적실성)** 가계 지출의 63%를 차지하는 필수 생계비 부담과 양극화 심화는 현재 서울시의 가장 뼈아픈 구조적 모순임. 시민들이 가장 고통받는 비급여 의료비 문제,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먹거리 불안, 전월세 급등을 정책 최우선 순위로 둔 것은 지역사회의 욕구와 완벽히 부합함.

- 다만, 공공병원 확충은 필요하나, 현행 서울시 산하 공공병원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은 부재하며,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에서 비급여 비용까지 부담할 경우 과잉진료에 대한 통제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실현 가능성은 낮음.

○ **(후보자의 특성)** 시민의 노동권과 주거권을 수호하겠다는 확고한 철학은 돋보임. 그러나 ‘다주택자 재산세 탄력세율 상향’이나 ‘민간 버스 공영제 전환’은 시의회, 중앙정부, 민간 사업자와의 극심한 마찰과 저항을 예고함. 이러한 거대한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다원적 소통 능력과 갈등 해결 리더십에 대해서는 구호에만 그칠게 아니라 더욱 치밀한 계획과 대안이 필요함.

○ **(총평)** 권영국 후보자의 제1핵심공약인 ‘생활필수재 공공보장(주거·교통·의료·먹거리)’은 시민의 기본권을 시장의 영역에서 공공의 책임으로 끌어올린다는 점에서 개혁성과 적실성이 매우 뛰어난 정책임. 그러나 막대한 예산안의 객관적인 추계나 재원 마련 방안이 불투명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낮고 구호에만 그칠 가능성이 높음. 또한 거버넌스 측면에서 버스 완전 공영제 전환이나 다주택자 증세 등은 막대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공약 실행 과정에서의 리더십이 촘촘하게 입증되어야 함.

- **(조세 저항 및 재원 마련의 정치적 불확실성)**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3,000~5,000억 원)과 기존 예산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은 기득권의 강력한 조세 저항과 행정 소송 등에 부딪혀 예산 확보 단계에서 무산될 위험이 큼.
 - 막연한 증세 논리를 넘어, “시민 체감형 기본서비스 데시보드” 까지 구축해야 함. 추가로 걷힌 세금이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시민 개인의 생활비 절감으로 어떻게 순환되는지, 그 경제적 효용과 한계비용을 투명하게 시각화하여 유권자들의 압도적 동의를 얻어내는 데이터 기반의 직관적인 설득 과정이 병행되어야 함.
- **(행정비용 폭증과 복지 사각지대)**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나 ‘공공임대 표준임대료’ 적용 시, 시민이 일일이 영수증과 소득 증빙 서류를 챙겨 관공서에 신청해야 한다면 막대한 행정력과 비용이 발생하고 정보 취약계층은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할 우려가 큼.
 - “신청주의 복지의 폐단”을 막기 위한 방안까지 시스템적으로 마련할 필요 (예: 상한액이나 표준임대료 초과 시 환급까지 처리해 주는 스마트 행정 시스템 결합)
- **(전면 무상 대중교통의 혼잡도 가중 우려)** 중교통의 완전 무상화가 달성될 경우, 출퇴근 러쉬아워 때 불필요한 단거리 수요까지 겹쳐 지하철과 버스의 혼잡도가 높아질 우려.
 - 일률적인 무상화 보단, 혼잡 시간대와 수요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
 - 또한 비혼잡 시간대 이용을 유도하는 디지털 바우처를 제공하여 인프라의 과부하를 막고 무상 대중교통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

② (제2핵심공약: 노동) 모든 시민이 노동권의 주체가 되는 서울

[공약 내용]

○ **(핵심요지)** 서울시가 단순한 행정기관을 넘어 **지방정부·모범 사용자·최후의 고용주**로서 5인 미만 사업장,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자영업자까지 포함해 노동권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구상. 즉, 5인 미만 사업장·플랫폼·특수고용·자영업자까지 노동권 보호 대상으로 넓히고, AI 전환·기후위기·공공부문 고용 문제에 대응해 **서울을 노동권 보장 도시로 만들겠다는 노동공약.**

- **(문제인식)** 서울은 노동자가 가장 많이 일하는 도시지만, 5인 미만 사업장·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등 노동권 사각지대도 넓다는 진단
- **(핵심방향)** 서울시가 **지방정부·모범 사용자·최후의 고용주** 역할을 하며 노동권 보장 체계를 확대
-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 서울시 **노동권 보장 조례** 제정, 5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추진
- **(플랫폼·특수고용 보호)**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에게 건당 공정단가를 도입해 **최저보수 보장**
- **(노동감독·임금체불 대응)** 2027년부터 이양되는 노동감독권을 활용해 임금체불 근절 및 대지급 추진
- **(불안정 노동자 지원)** 건강검진·휴가·문화생활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카드** 도입
- **(AI 시대 일자리 전환)** 빅테크 기업에 **AI 전환기금** 납부를 의무화해 재교육·직무전환·청년 일자리 창출에 활용
- **(노동시간 단축)** 공공기관부터 주4일제를 시행하고, 민간기업 노동시간 단축 지원 및 포괄 임금 금지 추진
- **(기후수당)** 폭염·한파로 야외·이동·물류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할 경우 임금 일부를 보상하는 **기후수당** 시범 실시
- **(공공개혁)** 공공기관·민간위탁 포함 노정교섭 실시, 외주·용역·부당한 기간제 등 ‘나쁜 일자리’ 퇴출, 상시업무 직고용 전환
- **(노동행정체계)** 노동부시장과 노동정책국 신설, 노동안전감시단 운영, 노조 조직률 20% 목표
- **(자영업자 안전망)** 자영업자 고용보험·산재·상병수당 지원, 상가 환산보증금 폐지, 임대료 상한제 추진
- **(예산규모)**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 AI 일자리 전환, 기후수당, 공공부문 직고용, 자영업자 안전망 등을 합쳐 **연간 약 1조 2,000억 원** 규모로 제시
- **(재원조달)** AI 전환기금, 고용노동부 협력사업비, 외주·용역 직고용 전환에 따른 중간업체 이윤 절감분, 기존 예산 구조조정 활용

[공약 평가]

- **(공약의 구체성)** 정책 대상과 수단이 매우 폭넓고 명확하며, 플랫폼·프리랜서·5인 미만 사업장, 공공부문 외주·용역, AI 전환, 기후위기 노동, 노동시간 단축을 함께 다룬 것도 적절함. 연간 약 1조 2,000억 원의 예산을 6개 분야로 나누고, 4년간의 로드맵을 매우 상세하게 제시한 점은 긍정적인 점.
- 그러나 대부분의 이행기간이 임기 내로만 제시되어 있고, 세부 사업별 예산·연차별 목표·법적 권한 검토는 부족함. 특히, 중앙정부나 국회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공약들도 존재함. 또한 재원 조달 방안 중 핵심인 ‘일정 매출 이상 빅테크 기업의 AI 전환 기금 납부 의무화(연 500~1,000억)’와 ‘코로나19 소급 보상’은 중앙정부의 법률 개정(조세법률주의 등) 없이는 서울시 단독 조례로 강제하기 어려워 정책의 완결성에 한계가 있음.
- **(공약의 개혁성)** 노동자를 단순한 복지 수혜자나 일자리 수혜자가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설정하고 있는 점은 우수함. 플랫폼 종사자와 자영업자를 노동자로 포괄하고, 폭염·한파 기후수당 신설, 공공기관 주 4일제 시범 도입, AI 도입 사전 노사 교섭 의무화 등은 지속가능한 미래 비전을 담은 압도적으로 개혁적인 공약임. 특히, 서울시의 사용자 책임, 공공조달 책임, 노정교섭, 노동정책 전담조직을 제시한 점은 매우 개혁적임. 단순한 일자리 창출을 넘어, 노동의 질과 권익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돋보임.
- **(공약의 적실성)** 서울 노동시장의 핵심 현안인 불안정노동,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5인 미만 사업장, 외주·용역, 임금체불, 노동시간, AI 전환, 기후위기 노동 등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적실성이 높음
- 특히, 배달·대리 등 플랫폼 노동자의 불안정성 심화와, AI 기술 도입으로 인한 3040 세대의 일자리 대체 위협은 현재 지역사회와 노동계가 가장 시급하게 느끼는 핵심 현안임. 변화하는 산업 구조 속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욕구를 정확히 짚어냈음.
- **(후보자의 특성)** 노동 약자를 보호하려는 일관된 철학과 노동 정책에 대한 깊은 전문성을 보여줌. 특히, 노동부시장, 노동정책국, 공공부문 노정교섭, 공공운수노조와의 정책 협의 등 노동정책 집행체계와 협력구조를 함께 제시하는 등 노동에 대한 이해가 높음.
- 다만, 다른 후보들보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내용이 다소 부족함. 실제 집행을 위해서는 중앙정부·국회·자치구·사용자단체와의 협력 및 협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특히, 빅테크 기업, 상가 임대인, 중앙정부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주체들을 설득하고 타협을 이끌어낼 소통 리더십이 향후 공약 실천의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이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설득 논리가 필요.

○ **(총평)** 권영국 후보자의 제2핵심공약인 ‘모든 시민이 노동권의 주체가 되는 서울’은 플랫폼 노동, AI로 인한 일자리 전환, 기후 위기 등 **미래 노동 시장의 본질적인 위협을 꿰뚫어 본 매우 혁신적인 정책임**. 노동·일자리 정책만 놓고 보면, 매우 포괄적이고 개혁적인 노동권 공약을 제시했음. 플랫폼·프리랜서·5인 미만 사업장, 공공부문 외주화, AI 전환, 기후위기 노동, 돌봄노동 등 서울 노동시장의 핵심 현안을 정면으로 다룬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실현 가능성 면에서 서울시장의 권한을 넘어선 현실성이 없는 공약에 불과. 노동시간 단축, AI 전환 기금, 코로나19 소급 보상, 상가 임대료 상한제 등은 적실성이나 개혁성은 높지만, 지방자치단체장과 서울시 단독 조례만으로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고, 반드시 중앙정부나 국회와의 협력이 요구돼 공약의 구체성이 부족함. 또한 이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시장의 강한 반발을 부를 수밖에 없는데, 거버넌스 측면에서 사회적 합의 방안을 함께 제시하지 않아 단순히 정치적인 구호에만 그칠 가능성이 높음. 노동 전문가로서 후보자의 전문성과 강력한 개혁 의지만큼은 존중하지만, 공약 이행의 책임성이 낮고 실현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 **(AI 전환기금 강제 징수의 법적 한계와 기업 이탈 우려)** 지자체가 빅테크 기업에 특정 기금을 강제 납부하도록 조례를 만드는 것은 상위법 위반 소지가 크며, 자칫 혁신 기업들의 “탈한국” 현상을 초래할 수 있음. 이에 대한 반박논리 필요함.
 - 징벌적 성격의 납부 의무화가 아니라, 기업의 자발적 투자를 유도하는 “(가칭) AI-노동 상생 데이터 거버넌스 협약” 모델로 개선돼야 함.
- **(플랫폼 노동 최저보수 산정의 어려움)** 여러 배달·호출 앱을 동시에 켜고 이동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특성상, 근로 시간과 대기 시간을 정확히 분리하여 최저보수를 산정하기가 기술적으로 매우 힘들.
 - 특정 민간 기업의 플랫폼 알고리즘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가칭) 서울형 통합 노동시간 측정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 노동자의 동의하에 분산된 플랫폼 데이터를 융합·분석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보수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시민 감시 체계가 필수적임.
- **(상가 임대료 상한제로 인한 시장 부작용)** 환산보증금 폐지 및 임대료 상한제(인상률 제한)를 확일적으로 강제할 경우, 상권 침체기에도 유연한 대처가 어렵고 음성적인 권리금 폭등 등 시장 왜곡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방적 규제 대신, 상권 유동인구·매출 데이터를 고려한 “상가임대료 예측 모델”을 개발하여,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 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지표로 활용할 것을 추천함.

㉓ (제3핵심공약: 사회복지) 공공돌봄 도시 서울

[공약 내용]

- **(핵심요지)** 돌봄을 개인과 가족의 부담이 아니라 **서울시가 책임지는 공공서비스**로 전환하고, 아동·어르신·간병·지역돌봄을 통합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구상. 즉, 서울사회서비스원 복원, 공공통합돌봄센터, 공공 간병지원,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을 통해 **돌봄을 가족 부담에서 공공 책임으로 전환하겠다는 공공돌봄 공약**.
- **(문제인식)** 고령화로 돌봄 수요는 커지지만, 돌봄 부담은 개인·가족, 특히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으며 돌봄 노동자의 처우도 열악하다는 진단
- **(핵심방향)** 돌봄을 시장·가족 책임에서 **공공 책임**으로 전환하고, 생애주기별 공공돌봄 체계를 구축
- **(공공돌봄 인프라)** 서울사회서비스원 즉각 복원, 자치구별 **공공통합돌봄센터** 설치
- **(돌봄 노동자 처우)** 서울형 돌봄 노동 가이드라인 제정: 직접고용 확대, 생활임금 적용, 야간 2인 1조, 휴게시간 보장
- **(간병지원)** 공공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00% 실시 및 민간병원 확대, 서울시 직영 간병인 공공 플랫폼 **서울 간병지원센터** 설립
- **(지역 돌봄 일자리)** 지역 돌봄 사관학교 운영, 기초돌봄부터 전문 간호·심리상담까지 무상 교육 후 돌봄 일자리 연계
- **(공동체 돌봄)** 이웃돌봄·반찬나눔 등 돌봄·공동체 활동에 참여소득 지급
- **(아동 돌봄)** 초등돌봄교사 채용,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마을학교·마을교사 제도, 아빠육아휴직 3개월 의무 할당제, 서울형 대체인력지원센터
- **(어르신 돌봄)** 공공실버주택 확충, 경로당을 어르신건강문화센터로 개편, 약국·편의점 돌봄보안관 지정, 서울형 기초연금 보조와 어르신 일자리 신설
- **(로드맵)** 1년차 서울사회서비스원 복원·5개 자치구 공공통합돌봄센터 시범 → 2년차 15개 자치구 확대·서울 간병지원센터 운영 → 3년차 25개 자치구 설치 완료·간호간병통합서비스 100% → 4년차 공공돌봄 체계 종합평가 및 정착
- **(재원조달)** 보건복지부·서울시교육청 협약을 통한 국비·교육청 예산 확보, 재산세 탄력세율 조정, 기존 예산 구조조정, AI 전환기금 일부 활용 등을 제시

[공약 평가]

- **(공약의 구체성)** 아동과 어르신에 대한 돌봄, 간병 등의 돌봄서비스 내용이 상대적으로 구체적이며 재원확보 마련 방안 역시 제시되어 있음. 4년간 총 2조 4천억 원의 예산을 돌봄 사회화 기반(8,000억), 사관학교(3,000억), 아동(7,000억), 어르신(6,000억)으로 정교하게 분배했음. 재원 조달에 있어서도 단순 증세를 넘어 국비 매칭, 기

존 민간위탁 중간비용 절감분 활용, 그리고 ‘AI 전환 기금의 연계’ 라는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자금 흐름을 설계한 점이 돋보임. 특히, 돌봄의 핵심인 인력의 양성과 배치에 대해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사회서비스원 복원과 공공통합돌봄센터 설치는 지역내 서비스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됨.

- **(공약의 개혁성)** 돌봄서비스의 확충뿐 아니라 돌봄노동자들의 일자리 질에 대한 공약이 함께 제시되어 있어 다수의 삶의 질과 권익을 강화할 수 있음. 민간 중심의 서비스 공급체계 하에서 낮은 서비스질과 종사자 처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인력의 양성과 배치, 지원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을 부여하여 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한 점은 개혁적임.
 - 여성과 가족에게 전가되던 돌봄 노동을 온전한 ‘사회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서울사회서비스원 복원 및 돌봄 노동자 직접 고용을 통해 공공성을 회복하려는 시도는 매우 개혁적임.
 - 특히 ‘아빠 육아휴직 3개월 의무 할당제’ 등은 기존 노동 시장의 관행을 뒤흔드는 파격적인 조치로, 돌봄 노동자의 권익과 시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비전임.
- **(공약의 적실성)** 서울의 65세 이상 인구가 19%를 넘어서고, 간병 파산과 독거노인 고독사가 연일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현시점에서 가장 절실한 공약임. 초등돌봄 대기 문제나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 등 현장의 아픈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 환경의 최우선 순위에 배치했음. 의료와 돌봄의 경계 지대에서 온전히 환자의 부담이 되고있는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00% 실시’와 ‘서울 간병지원센터 설립’은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선도적 정책이 될 것으로 평가함.
 - 다만, 돌봄을 위해 재정이 약 2조 4천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추상적으로 구체적 대책이 필요. 공공돌봄의 확충은 바람직한 방향이나 기존의 돌봄서비스 또는 통합돌봄서비스와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의 큰 틀에서의 고민과 계획이 부족함.
- **(후보자의 특성)** 돌봄의 위기를 단순한 복지 지출이 아닌 ‘지역 활력을 위한 투자(일자리 창출)’로 프레이밍하는 정책적 거시 안목이 뛰어남.
 - 다만,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으나, 행정실무 경험이 불충분함. 특히, 민간 병원·어린이집의 반발이나 아빠 육아휴직 강제에 따른 기업들의 불만 등 복잡한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에 대한 정치적·행정적 타협 리더십은 향후 과제로 남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득 논리가 매우 필요.

○ **(총평)** 권영국 후보자의 제3핵심공약인 ‘공공돌봄 도시 서울’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저출생 등 서울이 직면한 가장 치명적인 위기를 ‘돌봄의 공공화’로 돌파하려는 탁월한 정책임. 특히, AI 도입으로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노동자를 ‘지역 돌봄사관학교’와 연계해 돌봄 인력으로 전환하겠다는 발상은 정책 간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매우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접근임. 다만, 약국·편의점을 활용한 ‘돌봄 보안관’ 등 일부 아날로그적 방식은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어, 스마트 돌봄 데이터 거버넌스로 전면 고도화가 보완돼야 함.

- **(아날로그 방식의 '돌봄 보안관'의 한계)** 약국과 편의점을 '돌봄 보안관'으로 지정하여 위기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겠다는 계획은 인력의 직관과 수작업에 의존하므로, 거동이 불편해 외출 자체를 하지 못하는 초고위험군 독거노인의 사각지대를 방치할 수 있음.
 - 공약에 “(가칭) AI·IoT 기반 스마트 안심 케어망 구축”을 추가해야 함. 전력량, 수도 사용량 데이터 패턴을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해 이상 징후 발생 시 공공통합돌봄센터와 지역 돌봄 보안관의 태블릿으로 즉각 알림을 전송하는 디지털 신경망이 결합돼야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음.
- **(돌봄 수요-공급 매칭의 비효율성)** 돌봄사관학교를 통해 매년 수천 명의 인력이 쏟아져 나오고 지역 돌봄 수요가 폭증할 때, 이를 수동으로 배정하면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행정비용이 급증함. 특히, 수급자에게 필요한 요양보호사나 돌봄 노동자에 대한 정보 비교가 어려워 선택권이 제한됨.
 - 특히 돌봄 노동자의 경력, 전문성, 선호 시간대, 수급자의 세밀한 요구 조건(질환 종류, 선호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플랫폼에 관련 정보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자의 매칭 서비스 만족도와 선택권을 극대화하고, 돌봄 노동자의 피로도 또한 낮출 필요

(표식: **음영**=3대 핵심공약과 동일, **[]**=3대 핵심공약 외 나머지 5대 공약)

서울시장후보자	1순위 공약	2순위 공약	3순위 공약	4순위 공약	5순위 공약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교통) 30분 통근도시 실현으로 시민에게 쉽표 를. 10분 역사권, 5분 정류소, 격자형 철도망, 모두의기후동행카드	(도시) 서울 공간 대전환 - 5도심·6광역중심 체계로의 전환. 청량리·왕십리, 신촌·홍대 등 혁신도심 확대	(청년) 도전과 실패가 경력이 되고 자산이 되는 청년창업수도 서울: 창업도전캠퍼스, 창업도전수당, 서울창업경험은행	(사회복지) 시간 공백 없는 아이돌봄 지원체계 구축: 초등돌봄시설 확충, 아이돌봄사 확대, 긴급돌봄 연결	(사회복지) 4050센터와 시니어라이프캠퍼스로 서울시민 활력회복: 4050플러스센터 장갑다리 일자리 시니어라이프캠퍼스
오세훈 (국민의힘)	(주택) 멈춰선 공급에 속도를 압도적 주택공급: 신속통합기획 2.0,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주택) 무너진 주거이동 안전망을 복원하겠습니다. 공공주택 13만 호, 바로 내걸 6,500호, 민간입대 지원	(교통) 이동의 답답함을 풀어내는 서울 교통 대전환 강북·서남권 교통대동맥 20.8조 원, 도시철도 7개 노선, 서울기후동행패스	(사회복지) 더 따뜻한 서울, 약자와의 동행 시즌 2: 디딤돌소득 2.0, 서울런 확대, 초등돌봄 130개 확충, 서울형 IRP	(노동) 매년 100만 기회, 내일이 더 기대되는 서울: 권역별 산업전략, 넥스트이코노미 서울펀드, 직업훈련·공공일자리·관광고용
김정철 (개혁신당)	(공공AI) AI행정혁신을 통한 찾아오는 서울: AI 행정포털, AI 인허가, 수익계약 제로, 복지 사각지대 자동발굴	(교통) 규제 혁신을 통한 막힘없는 서울: 강남·강북 맞춤형 규제 완화, AI 재건축 분청 해결, 9호선 우회 BRT	(공공AI) 시민·관변단체 구조 개혁을 통한 효율적인 서울: 보조금 전면 재검토 AI 감사, 성과평가, 정책 연속성	(사회복지) 복지의 재설계를 통한 받쳐주는 서울: AI 정밀복지, 서울형 주택연금, 플랫폼·프리랜서 노동권 보호	(도시) 1인 가구 중심 도시로 재설계되는 서울: 역세권 1인가구 규제 프리존, 1인가구 정책관, 생애주기 통합관리
권영국 (정의당)	(노동) 모든 시민이 노동권의 주체가 되는 서울: 노동권 보장 조례, 플랫폼 최저보수, AI 전환기금, 주4일제, 기후수당	(사회복지) 주거·교통·의료·먹거리 기본서비스를 공공이 책임지는 서울: 기본서비스 보장 조례, 공공입대 10만 호, 대중교통무상화, 병원비 상한제	(사회복지) 돌봄의 무게를 덜고, 돌봄이 활력이 되는 공공돌봄도시 서울: 서울사회서비스원 복원, 공공통합돌봄센터, 서울 간병지원센터	(환경) 에너지자립과 자원순환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서울: 재생에너지, 그린리모델링, 자원순환, 수도권-지역상생기금	(인권) 당신이 누구이든 상관없이 평등과 안전으로 혐오와 차별 없는 서울: 차별금지조례, 성평등입금공시제, 생활동반자인증제, 동물권 조례

○ (정원오 서울시장후보) ① (교통) 30분 통근도시, ② (도시) 5도심·6광역중심 체계, ③ (청년) 청년창업수도, ④ (사회복지) 아이돌봄 지원체계, ⑤ (사회복지) 4050센터와 시니어라이프 캠퍼스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5대 공약 중 ①②순위 공약은 3대 핵심공약과 일치했지만 그 순위가 달랐고, 나머지 ③④⑤순위 공약은 3대 핵심공약에서 제외됐다. 반면, 기존 5대 공약에서는 없었던 ‘(안전) 선제적 예방투자와 재난관리 페러다임 전환’ 을 제3핵심공약으로 새롭게 제시해 그 중요성과 차별성을 높였다.

○ (오세훈 서울시장후보) ① (주택)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② (도시) 주거이동 안전망, ③ (교통) 서울 교통 대전환, ④ (사회복지) 약자와의 동행 시즌 2, ⑤ (노동) 매년 100만 서울 일자리 창출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5대 공약 중 ②③순위 공약은 3대 핵심공약과 일치했지만, 나머지 ①*④⑤순위 공약은 3대 핵심공약에서 제외됐고, 차순위 공약들을 제1·2핵심공약으로 제시했다. 또한 기존 5대 공약 중 ③순위 공약의 하위 ‘(교통) 서울기후동행패스’ 부분을 나누어 제3핵심공약으로 제시해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 2012년~2025년 서울시 정비사업 주택 공급효과 분석결과(경실련, 2026. 5. 14.) 지난 14년간 주택 순공급량이 5.3만호(연평균 4천호) 수준에 불과하므로,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공급은 현실성(공약의 적실성)이 없다고 판단

○ (김정철 서울시장후보) ① (공공AI) AI행정혁신, ② (교통) 규제혁신, ③ (공공AI) 시민·관변단체 구조개혁, ④ (사회복지) 복지 재설계, ⑤ (도시) 1인 가구 중심 도시 재설계로 구성

되어 있다. 해당 5대 공약 중 ①②순위 공약은 3대 핵심공약과 그 순위까지 일치했지만, 나머지 ③^{**}④⑤순위 공약은 3대 핵심공약에서 제외됐다. 기존 5대 공약 중 ②순위 공약의 하위 ‘(교통) AI 신호·BRT로 교통혁신’ 부분을 나누어 제3핵심공약으로 제시해 중요성을 그 강조했다.

** 경실련이 서울시 보조금을 받지 않음에도 시민단체 정견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내세우기 매우 부적절함을 감안

- (권영국 서울시장후보) ① (노동) 노동권, ② (사회복지) 기본서비스, ③ (사회복지) 공공돌봄, ④ (환경) 기후위기 대응, ⑤ (인권) 차별금지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5대 공약 중 ①②③ 순위 공약은 3대 핵심공약과 그 순위까지 일치해 공약의 일관성이 매우 높았다.

III. 경실련 개혁과제 공약 제안

[전국공통 개혁과제]

1 버스 준공영제 투명성 및 공공성 강화

- 버스 재정지원·정산 체계의 전면 공개와 독립 검증 강화를 통한 투명성 확보
- 시민 이동권 중심의 서비스 개편과 성과 연동 강화
- 공공 주도 운영체계 확립과 시민참여 거버넌스 실질화
- 중소도시, 농·어촌 버스 공공성 강화

2 건설산업 지역주민 의무고용제 도입

- 지역주민 고용확대를 위한 의무고용비율설정 (조례 제·개정)
- 지역 건설공사 일자리 현황 정기적 발표

3 시민 안전을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화 및 내실화

- 모든 지자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의무화 및 내실화
- 지역건축안전센터 안전인력의 처우개선
- 허가권자가 공공 및 민간건축물에 대한 제반 감리일지·보고서 상시 공개

4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실시

- 농어촌기본소득 농어촌지역 전면 실시
-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

5 지역 완결적 의료를 위한 공공병원 확충 및 공공성 강화

- 70개 중진료권 내 ‘500병상 급’ 지방의료원 1개소 확보
- 의사/간호사 인력 확충방안 마련

- 재정지원방안 마련
- 공공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시범사업
- 비급여 없는 공공병원 시범사업 실시

[서울특별시 개혁과제]

6 종묘 앞 세운지구 재개발 원점 재검토 및 투명성 강화

- 종묘 앞 세운지구 재개발 사업 원점 재검토
- 용적률·높이 완화의 경위와 공공기여 산정 근거 전면 공개
- 개발이익의 귀속, 공공환수 장치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적정성 재검토
- 문화유산 보호 중심 개발 기준에 대한 재정립

7 서울시민이 ‘부담가능한’ 주택공급 확대

- 이주수요와 부담가능 여부를 고려한 단계적이고 차분한 개발계획 수립
- 재개발·재건축, 소규모정비사업 등 개발절차 진행시 절차적 정당성 확보
- 서울시 주택공급 방식의 전환
- 저밀도 저층주거지 및 서민주거지 공급방식 및 내용 전환, 장기적 공공주도 개발계획 수립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서울시민 안전생활환경 제공

- 집중호우 침수피해 저감을 위한 방재시설의 지속적 확충과 친환경 도시개발 추진
- 여름철 폭염일수 증가 및 열섬현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개발 정책 연계
- 우수저류를 통한 중수도 활용 확대

9 지역 의료·돌봄 통합 연계 체계 강화

- 의료·요양 지역돌봄 공공 인프라 확충
- 자치구별 일차의료 공공의원 시범사업
- 재정지원방안 마련

10 서울시 AI 정책 투명성·책임성 강화

- 서울시 AI 정책 포털 개설(사업, 예산 등 투명한 정보 공개, 시민 의견 수렴 등)
- 서울시 AI 정책 민관 모니터링 위원회 구성

[경실련 개혁과제에 대한 서울시장후보 답변 결과]

전국공동 개혁과제	정원오(더불어민주당)	오세훈(국민의힘)	김정철(개혁신당)	권영국(정의당)
1. 버스 준공영제 투명성·공공성 강화	기타 일부찬성	기타 투명성·공공성 강화는 중요하지만, 동이운수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인건비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	찬성 재정지원·표준운송원가 공개, 외부 회계검증, 성과연동 필요. 다만, 목표는 투명성 자체가 아니라, 시민의 시간 절감이라고 설명	찬성 재정지원·정산 체계 공개, 독립 검증, 시민 이동권 중심 서비스 개편, 시민참여 거버넌스 수용
2. 건설산업 지역주민 의무고용제 도입	기타 일부찬성	반대 수도권에 일자리가 집중된 상황에서, 서울 지역 의무고용제는 지방 일자리 문제를 악화시키기 때문	기타 지역 일자리 확대 취지는 공감하지만, 40% 의무고용은 형식적 고용·시장 왜곡 우려가 있어, 입찰 가점·세제혜택·불법 사업장 배제 등 인센티브 방식 선호	찬성 지역주민 고용확대 의무고용 비율 설정과 지역 건설공사 일자리 현황 정기 발표 수용
3.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화·내실화	기타 일부찬성	찬성 이유 없음	찬성 서울은 설치보다 내실이 과제라며 안전인력 처우 개선, 감리 일지·보고서 기계가독형 공개, 의무 대상 외 자치구까지 확대 필요	찬성 모든 지자체 센터 설치·내실화, 안전인력 처우 개선, 감리 일지·보고서 상시 공개 수용
4.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실시	기타 일부찬성	반대 서울시가 시행한 ‘디딤돌 소득’이 더 나은 대안이기 때문	반대 현금 지급은 구조적 해법이 아니며, 농촌의 미래는 기본소득보다 농업의 직업 안정성과 청년 유입 구조 개선에 달려 있다는 입장	찬성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 순세계잉여금·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지원 조례 제정 수용
5. 공공병원 확충·공공성 강화	기타 일부찬성	기타 서울은 민간의료 인프라가 밀집되어 있어 양적 확충보다, 권역별 공공의료 재배치, 긴급치료센터, 필수의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	찬성 응급·소아·필수의료는 시장 실패 영역이며, 비급여 없는 공공 병원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공공이 표준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	찬성 70개 중진료권 내 500병상급 지방의료원, 인력 확충, 재정지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비급여 없는 공공병원 수용

서울특별시 개혁과제	정원오(더불어민주당)	오세훈(국민의힘)	김정철(개혁신당)	권영국(정의당)
6. 종묘 앞 세운지구 재개발 원점 재검토· 투명성 강화	찬성 이유 없음	기타 종묘 세계유산 가치 보존과 장기 정채된 도심 정비사업 정상화 모두 중요하므로, 상생의 합의점을 모색하겠다는 입장	기타 찬반을 미리 정하지 않고 경관 시뮬레이션, 세계유산 영향평가, 개발이익 산정 등을 재검증해 공개 한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	찬성 세운지구 재개발 원점 재검토, 용적률·높이 완화 경위 공개, 개발 이익 환수 장치 재검토, 문화유산 보호 기준 재정립 수용
7. 서울시민이 부담 가능한 주택공급 확대	찬성 이유 없음	기타 부담가능 주택 공급 노력은 밝히되, 특정 계층을 위한 재개발 보다 시민이 원하는 주거 형태를 존중하겠다는 입장	찬성 공급 총량보다 ‘누가 살 수 있는 집인가’가 기준이 되어야 하며, 1인가구·청년 등 수요에 맞춘 부담가능 주택 공급 필요	찬성 이주수요와 부담가능 여부를 고려한 단계적 개발, 질차적 정당성, 서민주거지·저층주거지의 장기적 공공주도 공급방식 전환 수용
8. 기후위기 대응 안전생활환경 제공	찬성 이유 없음	찬성 이유 없음	찬성 기후위기는 환경 문제가 아니라 안전·복지·주거 문제라며 침수 취약지역 우수저류·하수관거 정비, 기후취약 주거 대응 필요 주장	찬성 침수피해 저감 방재시설 확충, 폭염·열섬 대응 도시개발, 우수 저류를 통한 중수도 활용 확대 수용
9. 지역 의료·돌봄 통합 연계 체계 강화	찬성 이유 없음	기타 의료·요양·지역돌봄 공공 인프라 확충에는 찬성하지만, 자치 구별 일차의료 공공의원 시범사업은 유보	찬성 초고령사회에서 의료·요양· 돌봄 공백을 해소하려면 자치구별 일차의료 공공의원, 방문진료, 통합 돌봄 광역특별회계가 필요	찬성 의료·요양 지역돌봄 공공 인프라 확충, 자치구별 일차의료 공공의원 시범사업, 재정지원 방안 수용
10. 서울시 AI 정책 투명성·책임성 강화	찬성 이유 없음	기타 서울시 인공지능 기본조례를 근거로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고 있으나, 전용 포털·민관 모니터링 위원회는 기존 플랫폼과 위원회의 보완·확장 방향으로 검토	찬성 AI 정책 포털, 민관 모니터링 위원회, 인권·차별·개인정보 영향 평가에 적극 찬성하며 AI 도입 현황 공개 필요	찬성 AI 정책 포털 개설, 사업· 예산 공개, 시민 의견 수렴, AI 정책 민관 모니터링위원회 구성 수용